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 경제

nara.kdi.re.kr

2018 | 03 | VOL. 328

ISSUE 5G가 바꾸는 세상

NOW 코스닥 활성화 스타트!

특집

국민 '삶의 질'을 높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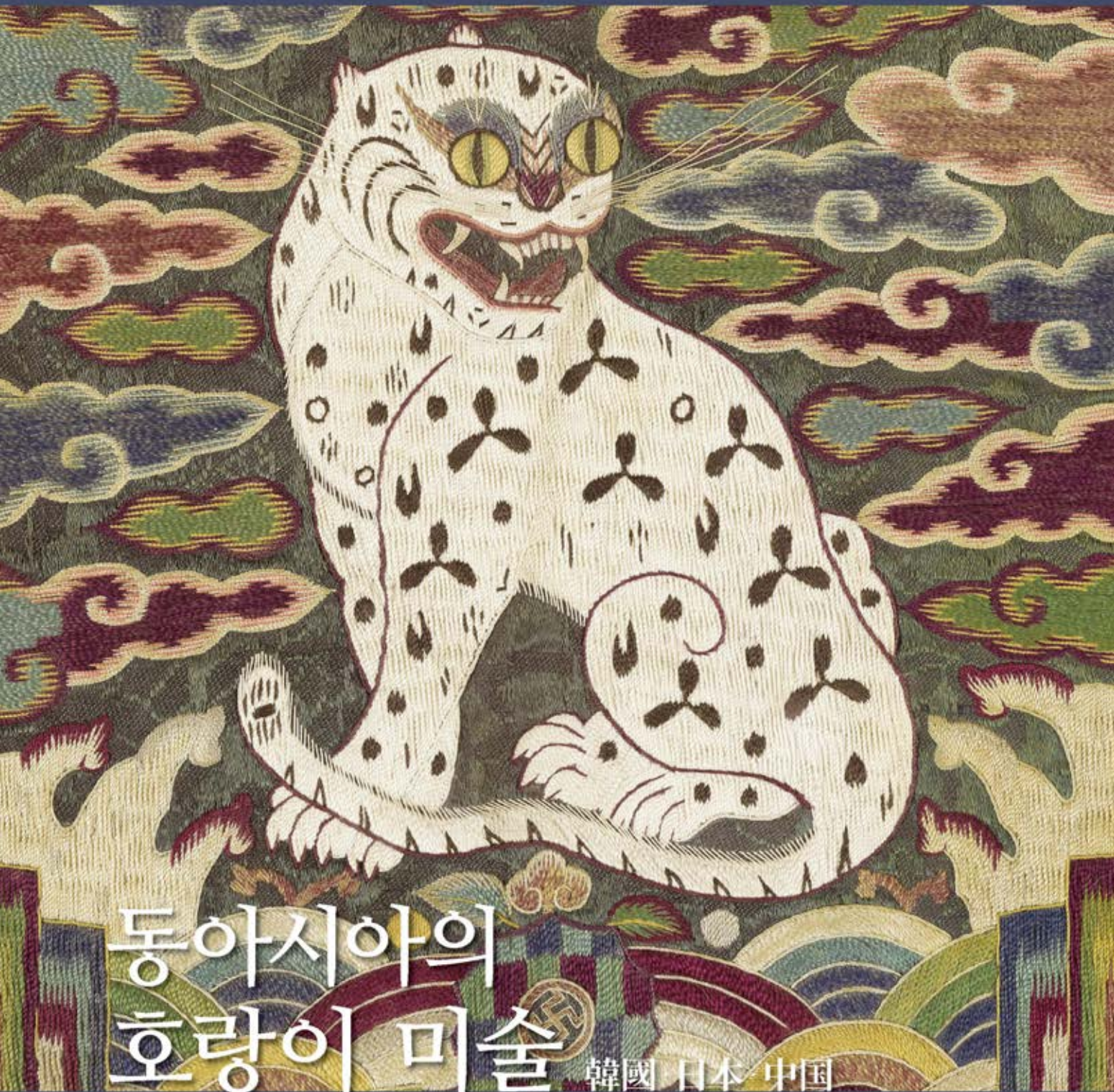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념 특별전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SPECIAL EXHIBITION

공동주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 韓國 日本 中国

TIGERS IN EAST ASIAN ART

2018. 1. 26. 금 ~ 3. 18. 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그렇게 열심히 뛰면 나중에 무엇이 남습니까

삶은 대부분 일상의 연속이지만 이따금 격류를 타는 듯한 사건이 있다. 그런 사건은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에서 몇 번 되지 않는다. 그런 굽적굽직한 터닝포인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 세월이 흐르면서 깨우치는 교훈은 삶은 정교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 같은 것이 삶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였어요?”란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확신했던 조직을 떠난 일일 것이다. 한 치도 의심하지 않았던 길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실패할 확률도 대단히 높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30대는 강한 신념에 따라 움직였던 시기였다. 신념은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의심을 날려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뭔가 불확실한 것을 추진하는 데는 나름의 신념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30대 초반 무렵부터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비영리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했고 행동도 따랐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구든지 새로운 일, 불확실한 일, 도전해볼 만한 일을 하는 중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재능은 활동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나 강점 등을 찾아내길 소망한다면 자주 도전해봐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누구든 크고 작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가능한 한 그 아쉬움은 작아야 한다. “그래, 내가 기대하던 결과를 모두 거둔 것은 아니지만 여한 없이 도전해봤다.” 이런 이야기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내 길이다’라는 확신도 이따금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평생 걸어갈 것으로 의심치 않았던 길에 수정을 가하게 된 것은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다. 그림자는 아무래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게 열심히 뛰면 나중에 무엇이 남습니까?”라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전직에 모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해보고 싶은 소망이 더 강해져서였지 않았을까 싶다.

새로운 자극이 오더라도 그동안 피부는 노력 때문에 웬만해선 있던 자리에 머무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뛰어들어서 지금은 지식사업가로 변신하게 됐다. 긍정적인 면에선 용기이고 다소 부정적인 면에선 만용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일을 만들어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겐 결정적인 시기가 한두 번 있다. 필자 또한 그런 기로에서 위험이 큰 길로 뛰어들었다.

조직을 떠난 지 18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삶은 여전히 안일함과 거리가 멀지만 대신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던 그날을 떠올릴 때면 “삶은 계속해서 도전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SPECIAL THEME

국민 '삶의 질'을 높여라



10 경제가 성장한 만큼 '삶의 질'도 나아졌을까?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12 노동시간 길수록 생산적 활동시간 낮아…

정교한 정책시행과 인식 변화 필요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14 개선효과 분석해 효과 큰 대책에 예산 집중을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 여가도 경력이 필요하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18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것

이동훈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장

20 행복은 균형이다

김진세 고려제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소장

22 “일, 가족, 교육 세 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 제시해야”

한준 한국삶의질학회 회장



5G가 바꾸는 세상

- 26** 4G보다 10~100배 빠른 5G가 온다
주영재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 27** 기술 혁신의 확산 위한 플랫폼이자
산업 간 융합 촉발하는 인프라
홍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5G사업전략실장
- 28** 따로 또 같이...
'세계 최초' 타이틀 건 전쟁 중
김용주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수석기자
- 29** "이런 것도 돼?"
손끝에서 이뤄지는 5G 세상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 30** 통신표준 선점이 전부가 아니다...
중국 5G 굴기에 숨은 이면
최형욱 핀란드 무역대표부
ICT 수석상무관
- 32** 6월 주파수 경매 실시하고
하반기 5G 융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장
- 33** 5G, 4차 산업혁명의 신경망...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과 규제 완화를
이현우 단국대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
5G Forum 대외전략위원장



NOW

코스닥 활성화 스타트!

- 48** 혁신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49** 정책 영향으로 상승세 보인다
美 금리인상 기조로 변동성 확대돼
김훈남 머니투데이 증권부 기자
- 50** 혁신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오형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52** 기업정보의 접근성·투명성 높아야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연중기획

스타트업 코리아

- 70** 임정욱이 만난 혁신기업가
그까지 쓰레기통?
남다른 폐기물 종합관리솔루션입니다
권순범 이큐브랩 대표
- 72** 사업화가 어려워...
내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결!
홍성아 나라경제 기자
- 74** 스타트업의 기회는
시장과 밀접한 창업생태계에서 나온다
이우진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원장

경제정책해설

- 54** 3월부터 일한국민도 예산사업 제안 가능
정한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
- 56** 사회 문제 해결형 ICT R&D 투자,
4.5%→45%로 강화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 58**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장

세계는 지금

- 60** OECD: 기관투자자들의 자본 공동소유
어떻게 봐야 할까?
이승규 주OECD대표부 참사관
- 63** WTO: 제네바의 하루 일과부터
다자 통상의 속성까지
윤동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 03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그렇게 열심히 뛰면 나중에 무엇이 남습니까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 34 김희삼의 인적자본론
'다이내믹 코리아'와 '수저계급론'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KDI 겸임연구위원
- 37 폰돈아 부탁해
스트레스 없이 품위유지비 줄이는 방법
구채희 「폰돈아 고마워」저자
- 38 지금 이 순간
시간의 속성
임운석 여행작가
- 40 경제학 소믈리에
스크린 독점과 차별적 상영배정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42 그들은 바쁘다 시즌 2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를 넘어 '정보공유'를 위하여
장동수 과장
- 53 독서의 문장들 아누 파르타넨,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과거로 후퇴한 미국 vs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북유럽 국가들
김이경 작가



- 66 인사이트
달리기치 하락, 세계경제 성장에 도움 될까?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68 감탄고탄 맞춤법
이것만 알아도 참 든든하다던데
박태하 출판편집자·작가
- 75 꽃보다 아빠
레벨상승
유신재 한겨레신문 기자
- 76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홍콩
악어에서 악어새로...변화하는 홍콩과 중국의 역학관계
홍창표 KOTRA 홍콩무역관장
- 78 통계, 세상과 소통하다
성범죄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기 어려운 이유
조재근 경성대 수확응용통계학부 교수
- 80 로드리고의 카메라 로드 올드타운
시간 위를 거닐다
박 로드리고 세희 촬영감독
- 84 허남웅의 신나는 시네 <플로리다 프로젝트>
디즈니랜드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화
허남웅 영화평론가
- 86 시평
오바마가 남긴 마법의 숫자와 혁신경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나라경제

2018. 3 [제29권 3호 통권 328호]

나라경제는 KDI와 16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김용성 KDI 원장 직무대행
편집인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이재열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정유리 혁신정책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삼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김윤정 다자경제기구과장 행정안전부 김장호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기획행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송지숙 홍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정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황의수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맹학균 지속가능전략담당관 고용노동부 김은철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강주엽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이수호 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박치형 기획재정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이현 창조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진선영 정책홍보팀장
편집기사	심지애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실
편집장	유성임
취재·편집기자	권기대, 양은주, 홍성아, 백경준
배포	고광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ISSN 1227-8033 03
구독문의	044-550-4656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8년 2월 28일(매월 말일 발행) 제29권 3호(통권 328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문의	044-550-4642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인쇄	(주)성우애드컴
사진	이래스튜디오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을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nara.kdi.re.kr

 www.facebook.com/kdinara1990

 KDI 나라경제

 KDI 나라경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나라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지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우편엽서에 의견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팀 (우) 30149

2월호 당첨자

김기주(서울시 도봉구) / 박수빈(경남 통영시) / 하효정(전북 완주군)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치(12개월) 외에 추가로 2개월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이메일: nara@kdi.re.kr

전화: 044-550-4656

• 온라인입금계좌

우리은행 254-012362-13-145(예금주: 한국개발연구원)



국민
‘삶의 질’을
높여라



SPECIAL THEME -

지난 1970년 1인당 국민소득 286달러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성장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나 만족도는 그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정 최우선 목표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었다.

어떻게 하면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당면과제로 떠오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나라경제』가
대한민국 삶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분야별 개선사항을
짚어봤다.

도입

경제가 성장한 만큼 '삶의 질'도 나아졌을까?

2015년 기준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로 기준연도인 2006년(100)에 비해 11.8% 상승
같은 기간 1인당 GDP(실질 기준)는 28.6%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세계경제 문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1961년 발족한 국제기구로 일명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린다. 이유는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 임금,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천달러였다. 그리고 2018년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예상되면서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만족도는 그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사실 한 나라의 국민 삶의 질과 만족도, 행복 등을 평가하는 데 단순히 소득의 크기만을 측정하는 GDP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삶의 만족도, 행복이나 웰빙(well-being)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 등은 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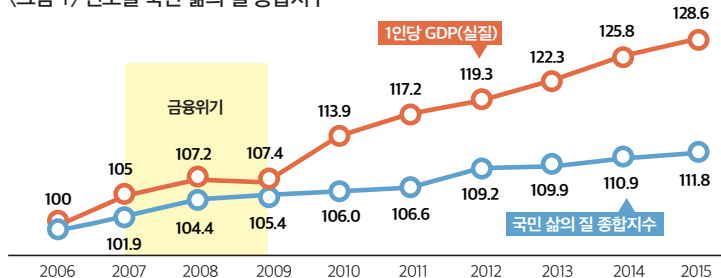
교육, 시민참여는 상위권

가장 대표적으로 OECD에서는 2011년부터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안전, 삶의 만족,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24개

지표로 구성)이 포함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Better Life Index)'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OECD가 내놓은 「2017 BL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38개 회원국 중 29위였다. 2014년 25위, 2015년 27위, 2016년 28위로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11개 세부 영역별로 보면 공동체(38위), 환경(36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삶의 만족(30위) 등이 하위권을 기록한 반면, 주거(6위), 교육(10위), 시민참여(10위) 등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노르웨이가 전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뒤를 이어 덴마크, 호주, 스웨덴, 캐나다의 순이었다. 국제연합(UN)이 발표하는 「2017 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57개국 중 56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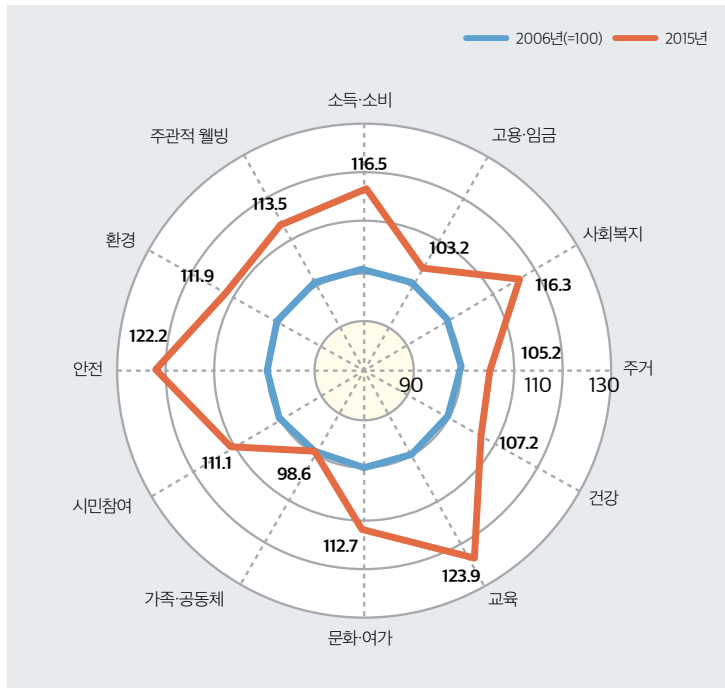
2012년부터 학계와 함께 삶의 질 측정 지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통계청도 지난해 5년간의 연구

〈그림 1〉 연도별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주: 2006년을 100으로 보고 산출 자료: 통계청

〈그림 2〉 국민 삶의 질 영역별 지수



주: 2015년 주관적 웰빙 수치는 전체 종합지수 산출 시 산입되는 지수 값으로 2013년 전체 종합지수의 평균값 반영
 자료: 통계청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삶의 질 종합지수(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 12개 영역 80개)는 111.8로 기준연도인 2006년(100)에 비해 1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GDP(실질 기준)는 28.6%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이 곧바로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영역 중 교육(23.9%), 안전(22.2%), 소득·소비(16.5%)에선 삶의 질이 평균(11.8%)보다 높았지만, 고용·임금(3.2%), 주거(5.2%), 건강(7.2%) 등은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공동체 영역은 -1.4%로 후퇴했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 유일하게 감소

눈여겨볼 점은 소득·소비와 고용·임금 지표가 상반되게 나온 것과 공교육 신뢰 저하, 교육비 부담 및 청년실업의 증가로 교육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교육 영역이 좋게 나타난 것

이다. 이는 소득·소비는 가구 기준으로 GDP 증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지만 고용·임금 지표는 개인 중심의 주관적 지표인 일자리 만족도가 하락하고 실업률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 중단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학교생활 만족도 등 9개 지표로 구성된 교육지수도 유아교육 취학률이 2006년 77%에서 2015년 92.1%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32.9%에서 45.5%로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 밖에 안전지수는 강력범죄 발생률(10만명당 556.6건→550.8건), 산업재해율(0.77%→0.50%), 사회안전 평가(8.2%→11.1%) 등은 개선됐으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10만명당 47.7명→131.8명), 화재발생 건수(3만1,778건→4만 4,435건) 등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13.5%),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 등은 종합지수와 유사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영역 지수는 낮은 상승 폭을 기록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2006년 100에서 2015년 98.6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한부모 가구 비율(8.8→9.5%), 독거노인 비율(18.1→20.8%), 자살률(21.8→26.5%) 등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는 가족·공동체, 고용·임금, 주거, 건강 등의 4개 영역에서 정체되거나 개선 속도가 더디 종합지수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국민 '삶의 질'은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많은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장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추진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올해가 국민 '삶의 질'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 ■

권기대 나라경제기자

일과 삶의 균형

노동시간 길수록 생산적 활동시간 낮아... 정교한 정책시행과 인식 변화 필요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ehlee@kookmin.ac.kr

우리 경제발전과 기업성장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면 성실하게 오래 일하는 인적자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347시간 길고, 멕시코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길다. 그나마 2004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정도다. 2000년만 해도 근로시간은 연 2,512시간으로 멕시코 2,311시간보다 압도적으로 길었다. 우리가 오래 일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서구 선진국이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200여년에 걸쳐 이룬 경제성장을 단 50년 만에 따라잡으려다 보니 오래 일할 수밖에 없었다. 오래 일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회사에 대한 헌신이며, 개인 능력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 경제 성장이 가능했고,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됐다.

젊은 세대, 가장 중요한 직장선택기준 '일-삶의 균형'
연장근무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공고한 신념이었지만 그 유효기간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효과성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시간을 줄여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2.1% 높다고 한다. 2016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 의뢰로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펴낸 직



장문화 보고서 역시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산적 활동시간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문화적인 부작용 때문이다. 야근으로 점철되는 '연장근로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가정에 충실하기 어렵고, 개인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남성 근로자는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으며 가사를 함께 부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여성 근로자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나머지 경

신세계는 올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더 짧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사진) 지난 1월 2일 오후 5시를 넘어서서 서울 성동구 신세계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력을 포기하거나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9%로 역시 최하위권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저출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인구절벽에 다다른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때문이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로 젊은이들은 안정과 가족을 꼽았다. 안정이란 정서적 안정이 우선이며 경제적 안정은 최소한의 여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직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일과 삶의 균형이다. 이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던 5060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성공적인 미래보다 현재의 일상과 여유에 더 집중하겠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시작은 대기업에서부터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7년 여름부터 '주 52시간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LG전자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신세계의 경우 더 파격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더 짧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신세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간별 매출 추이 등을 분석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및 프로세스 효율화 등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16개 계열사, 5만여명의 직원들이 당장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 하니 '드디어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희망도 갖게 된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설비 활용 극대화를 중시하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대한 것이다. 하청 및 재하청 구조의 하부에 있는 중소기업은 장시간 근로에 의한 비용 효율화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당장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이의 불균형도 문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이 당장 임금감소로 이어져 생계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을 가능성 때문에 정교한 정책시행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열매 따려면 '생산성 높은 근무'라는 대가 지불해야

먼저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 여부는 바로 8시간 근무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화해야 하고, 업무 집약도를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인근 카페에 모여서 일을 한다거나 모텔에서 밤을 새며 일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 끝에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 근로시간 단축 도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열매를 따려면 '생산성 높은 근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LG전자가 개인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휴식 시간 및 외출시간 등을 관리하는 것도 근무의 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시간만 단축하고 노동생산성은 그대로라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다. 기업의 경영자들도 마지못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젊은 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하다. 좋은 인재를 회사에 끌어들이려면 스마트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획일적인 적용이나 속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생산성본부나 능률협회 등의 기관이 특별팀을 꾸려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무분석,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임금체계의 변화 및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착의 심판 역할도 잘 수행해야 한다. ■

환경

개선효과 분석해 효과 큰 대책에 예산 집중을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gong@kei.re.kr

OECD는 우리나라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구 100만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2015년 360명 수준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OECD의 다른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의 수질 만족도가 78%로 OECD 평균 84%보다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환경을 대표하는 대기질과 수질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 상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요구된다.

모든 배출원에서 오염물질 삭감해야...

교통·에너지 수요관리 중요

대기오염은 건강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대기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미세먼지(PM2.5, PM10)와 황산화물을 포함해 8개 물질이지만 여기서는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PM2.5에 한정해 논의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PM2.5 연간 평균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WHO 가이드라인인 10 μ g/m³ 이상에 모든 국민이 노출돼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 연구단체 및 시민단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토론회를 통

해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범부처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지난해 9월 발표됐다.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우나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친환경차협력금제도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책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PM2.5 문제는 어느 특정 배출원의 관리만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모든 배출원에서 오염물질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소규모 사업장과 화목난로나 농업잔재물 소각과 같은 소형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병행돼야 한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삭감 수단별로 대기질 개선효과를 분석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대책에 예산을 집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교통·에너지 등의 수요관리가 어느 시점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규제를 통한 삭감대책은 효과를 짐작할 수 있으나 수요관리 대책은 시민의 참여 여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광화문 뒤로 푸른
하늘이 보인다.

하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므로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종합대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목표농도 설정이나 언론보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우리나라는 서로 영향을 주는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차제에 권역별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수도권 대기 환경청과 같은 별도의 행정기구가 지방에도 설치됐으면 한다.

하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되고 있어…

물 부족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은 문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물 관리에 투입된 비용은 33조4,107억원으로 대기질 개선과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국가가 정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었고 하천 생태계도 예전에 비해 점진적으로 건강성을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지속과 4대강 사업의 영향, 인구 증가와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 증가(여가활용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비점오염원의 배출 부하량 증

가 등은 당면한 문제다. 강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거의 달성하고 있으나 호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자원과 관련해선 강우량이 풍부하지만 1인당 재생 가능한 담수 수원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고, 이 때문에 35%라는 담수 수원의 이용 집약도를 보이며 물 부족 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2차 물관리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식수와 생활용수의 공급, 여가 활용에 적합한 수질 확보 및 수생태계의 복원 등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물 가격은 톤당 0.53~0.8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여전히 물 수요관리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물 관리 일원화 역시 중요한 당면 문제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 관련 법률은 「물환경보전법」을 비롯해 20개에 이르며 계획만도 대략 50개 정도다. 이렇게 각기 다른 법률과 계획을 해당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계획 간의 충돌과 예산의 중복, 그리고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기를 기대해본다. ■

문화여가

여가도 경력이 필요하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soyoung@kcti.re.kr

최근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휴게(Hygge), 율로(YOLO; You Only Live Once), 호모 나이트쿠스(Homo Nightcus) 등의 신조어는 우리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저녁과 주말도 없이 일만 하는 과로사회 증후군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개인'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내'가 스스로 체감하고 체감하는 삶이 중요하고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들이다.

노동시간 관리, 국민 휴식권 보장 등 기본적 사회환경 개선 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조건이 갑자기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 1,766시간(2015년 기준)과 비교해 한국(2,113시간)은 여전히 장시간 일하고 있으며, 과도한 노동시간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줘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5.8점/10점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더욱이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균형적인 삶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됐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부족(51.5%)이다(『2016 국민 여가활동조사』 결과). 일과 여가 시간을 균형 있게

하고 싶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TV 보는 것이 고작이고, 주말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는 미뤄둔 잠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연차 휴가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초과근무 등 노동시간 관리, 개인의 휴가권 보장,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등 기본적 사회환경의 개선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근로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약 61%(평균 사용일수 8.6일)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바꾸고 휴가를 권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호회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모델이 제안된다. (사진) 직장인 밴드인 '줄라이밴드'의 연말 공연 모습 (사진제공: 줄라이밴드)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여가생활 불만족의 두 번째 이유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 부담(33.4%)이다.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담을 느끼지 않더라도 '재정 악화 시 문화여가비 지출을 감소할 계획'이라는 사람이 30.3%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위해선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여가생활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넉넉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를 통해 여가를 즐기는 것이 진정한 여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일정부분 비용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실제 생활권 내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적지 않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에 맞게, 그리고 스스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경험 나이테' 쌓는 것이 중요...

'1인 1기' 경력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많은 사람들이 청년기나 중장년기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은퇴 후, 또는 노년기에 여유 있는 삶이 보장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이나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고 희망하지만, 나이가 들어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여가도 경력(leisure career)이 필요하다. 생애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과거 자신이 했던 역할과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대체하려 하며, 노화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자신의 과거 성격이나 경험과 연관시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 사회봉사 조직에 가입된 사람이나 사람들과의 교제 범위가 넓은 사람, 지적·예술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그러한 활동들을 해왔다. 반대로 은퇴 이후 여가활동이 감소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여가 관심의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따라서 여가참여의 활성화는 생애주기 초반부터 지

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가 진전되는 현시점에서 모든 개인들이 생애주기 후반까지 '1인 1기'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같이할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제안된다. 동호회나 클럽,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모델이 제안되는 이유다.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 2002)의 저서 「진정한 행복」에 의하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생활 속의 3가지 경험, 즉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the pleasant life), 만족스런 활동에 고도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는 것(the engaged life), 보다는 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경험하는 것(the meaningful life)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일으키는 여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재미를 동반한 여가나 놀이활동에 정신을 빼앗겨 열중하며,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사회구성원과 함께함으로써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유익성과 사회공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여가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발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국민 개개인이 여가생활에서 갖는 불만족과 제약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여가경력을 키우기 위한 경험 나이테를 쌓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 사회에서 행복감과 기쁨을 나누게 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경제가 어려워니까' 문화적 경험과 여가생활은 조금 미뤄두자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균형적인 워라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무엇보다 균형과 행복을 꿈꾸지만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전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것



이동훈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장
ydh2580@korea.kr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OECD 평균 대비 가장 하위권에 있는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지표 개선을 위한 정부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10일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정부는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 강화…

도심도로 제한속도 50km/h로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최고점이던 2011년 31.1명에서 2022년까지 약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가 1만명 이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발생했던 자살자 7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 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집중 발생지역, 자살 유형 및 경로 등을 파악해 대책 추진에 활용한다.



우선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명 규모로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찾아낼 것이다. 개입 단계에서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자살위험 제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확대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자살예방 문구가 적힌 서울 마포대교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살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사업장 종사자·실직자 및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종에 대한 특별관리는 물론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은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사회인식이 바뀌도록 생명 존중문화 조성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의 ‘차량소통’ 중심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천명 수준(2016년 4,292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로 낮추며,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올해 중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해 신규·기존 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신규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도 강화할 것이다.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한편 난폭운전과 보호구역 내 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물차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2019년)와 화물운전자 자격 유지검사제도(2020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2016

년 969명이던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500명 이하로 줄여들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 법제화

먼저,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작업자 보호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관리 책임을 현재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관리 아래 있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며 원청이 하청 재해율까지 통합·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위험 발생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청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확대해나간다.

둘째,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건설기계,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 등 4대 고위험 분야의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특히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까지 사망사고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 장비는 등록을 말소하는 등 안전검사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의 경우 원청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학업의 경우 고위험군 화학공장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차원에서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을 활성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총리실 주도로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구성, 향후 5년 내내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행복

행복은 균형이다



김진세 고려제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소장
drmeso@naver.com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런데 막상 행복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우습게도 '행복이 도대체 뭘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의문을 풀고자 70여명의 각계 저명인사들에게 물었다.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행복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

공통점은 '즐거움'과 '의미'

세상에 같은 행복은 없었다.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행복의 색깔은 달랐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최민수의 아내로 불리는 강주는 씨는 '불행마저도 껴안을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했다. 구호전문가 한비야 씨는 '열정'을,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했다.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인 이원복 교수는 '배고픈 시절에는 먹을 것 가득한 냉장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가 행복이라고 했다. 70여명 모두 행복에 대해 다른 정의를 내렸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다. 바로 '즐거움'과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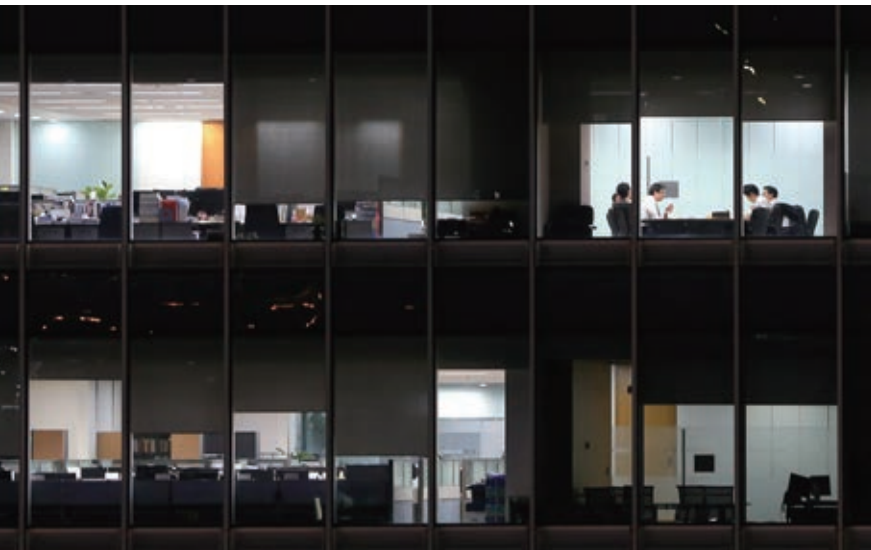
탈 벤 사하르의 「해피어」에 따르면 행복학자들은 행복을 '즐거움과 의미가 공존하는 주관적 감정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행복은 즐거워야 한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면 그저 순간의 쾌락일 뿐이다. 쾌락은 결국에는 타락과 파멸의 길로 이르게 된다.

그렇다고 의미만을 강조한다면 이 역시 진정한 행

복일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성공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성취지상주의다. '성취를 하려면 참아야 한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잘 버티고 노력하면 훗날에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가정법이 과연 옳을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도 불행하다며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단지 상담실에서만의 현상이었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더 비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는 불행한 나라에 속한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자살률이 1위다. 그것도 벌써 10년 넘게 1위를 하고 있는 데다 청소년부터 중년, 그리고 노년까지 전 연령층에서 1위를 하고 있다. 과연 자살을 많이 하는 국민들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강의 기적을 일군 성공한 국민들이지만 말이다.

행복은 즐거움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를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에 눌러 산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이다. 미국(1,783시간)이나 일본(1,713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하는 나라는 멕시코뿐이다. 쉴 시간이 없다. 1주일이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즐기며, 행복을 추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7년 우리나라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많다. (사진)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복잡하지만 무엇보다 생존본능과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나라는 늘 살아남기를 걱정해야 했다. 수많은 외세의 침공을 겪어야 했던 한반도에는 자원마저 빈곤하니 먹고살아가는 문제는 늘 시급했다. 생존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해야만 했다.

행복은 늘 '현재진행형', 지금 당장 시작

그런데 이제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지금이 가장 부유한 시절 아닌가. 배고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오로지 일에만 매달릴까?

첫째, 우리 민족의 무의식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인간은 불안해지면 살아남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하며 일은 가장 중요한 생존수단이다. 셋째, 우리의 가치관이 문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여태껏 돈이나 성공이 우리 가치관의 최상단에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자.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말이다.

우리는 일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맨날 놀고만 있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하면 눈을 감을 때 참 행복했었다고 할 수 있을까?

다행히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보면 희망이 보인다. 해마다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올 한 해 행복을 지향하는 새로운 행동양식을 볼 수 있다. 소확행, 플라시보 소비, 언택트, 케렌시아 등 알 듯 모를 듯한 신조어 중에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의 약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다.

워라벨은 일과 내 자신, 일과 여가, 그리고 일과 발전의 균형을 잡는 삶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삶이 팍팍하더라도 내 자신을 먼저 위하며, 여유로운 휴식의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자기계발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일이 아니고 삶이 중심이 돼야 행복해진다.

하루 빨리 일과 삶의 균형을 찾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불행을 넘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 워라벨을 시도하려면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하게 된다. 무의식을 바꾸고, 불안을 이겨내고,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극복법은 '속도 조절'이다. 당장 일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다. 천천히, 하기 쉬운 분야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주중 하루는 정시 퇴근을 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하자. 주말에는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산이나 동네 골목으로 여행을 떠나자. 수요일 점심에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만 골라 먹자. 1년에 한번은 전화기를 꺼놓고 늘어지게 쉬어보자.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잘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바라보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늦지 않았다. 우리는 가난을 극복한 민족이다. 불행도 극복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행복은 늘 '현재진행형'이어야 하니 말이다. ■

인터뷰

“일, 가족, 교육 세 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 제시해야”

한준 한국삶의질학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까?

오래전부터 비욘드 GDP(Beyond GDP)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GDP 중심 경제지표의 한계와 정책목표로서 ‘질적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람 중심 경제’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배 개선의 측면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더 확장해서 바라봐야 한다. 압축 경제성장에서 총량 중심의 경제적·물질적 산물을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소득과 분배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에서 우리나라가 2012년 24위에서 지난해 29위로 떨어졌다.

공동체(38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등이 하위권이더라. 이러한 취약 영역에서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정부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같은 문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압축성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균형적 성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몇 가지 영역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오지 않았다. 그

리다 보니 이러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제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개념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한국도 그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해 3월 16일 한국삶의질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종합지수가 갖는 의미는 뭔가?

경제성장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여기에 저출산, 사회갈등 심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의 등장으로 정책적 관심이 경제성장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됐다.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가 형성된 거다. 결국 삶의 질을 측정해 현재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어떤 수준인지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의 제공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다. 앞으로 이를 활용해 연구 및 정책에 반영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9% 늘어났지만, 국민 삶의 질은 12% 개선되는데 그쳤다.

삶의 질 지수에서 나오는 값들은 객관적인 것과 주



관적인 것이 섞여 있다. 그러다 보니 체감과 다른 부분이 있다. 교육 영역의 경우 국민의 체감은 나쁘고 부정적이다. 그런데 결과는 좋게 나온다. 국제적으로도 어느 국가보다 성과가 좋았다. 경쟁이 전체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개개인의 불만족은 높아진 거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좋은 기준이고 지표인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만한 지표들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LI), UN 세계행복보고서(WHR)는 어떻게 다른가?

OECD의 BLI와 UN의 WHR은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작성된 복합지표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제한된 핵심지표 위주로 구성된다. 반면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민생활의 추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OECD에는 가족이라는 영역이 없다. 가족은 사회적 관계나 커뮤니티 이런 것에 일부 들어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삶의 질’ 하면 꼭 들어가는 것이 가족이다. OECD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성돼 있지 않은 거다.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가족’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작성목적과 정보를 생산하는 방

식이 달라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삶의 질 향상은 과거 경제성장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몇 년 전에 연구를 하면서 생각해본 것이, 일반적인 한국인의 삶은 일, 가족, 교육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고 고도 성장기에는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축이 잘 맞아떨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둘 깨지면서 흔들렸다. 경쟁적인 교육에 내몰리고 불안정한 장시간 노동에 지쳐가고 가족도 해체되고 있다. 이제는 이 세 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일이라는 것도 단순히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계층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과거엔 ‘부모가 가난해도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실현 가능성도 높았는데 요즘에는 사회적 이동이 가로막혔다는 부정적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빈곤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시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삶의 질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 다양한 맥락에서 삶의 질이 언급되고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올라갔다 다시 관심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체질을 바꾸듯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변해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5G가 바꾸는 세상

평양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본 분들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LED 촛불로 비둘기를 표현한 '평화의 비둘기' 퍼포먼스 말이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이 일일이 촛불을 끄고 켜는 텐데 5G 기술 덕에 1,200명의 공연단원들은 LED 촛불을 들고만 있었고, 촛불의 점등과 밝기는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어했다고 한다.

4G보다 10~100배 빠르고 지연속도가 0.001초에 불과하다는 5G. 5G의 가능성은 이러한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들을 구현하는 데 있다. 눈앞에 성큼 다가온 5G 시대, 『나라경제』가 201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5G 추진전략과 기업들의 대응, 5G 기술과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ANALYSIS

5G

The image features a hand pointing towards a large hexagonal graphic that contains the text '5G'. The background is a blue digital interface with various data visualizations and network diagrams. The interface includes a grid of hexagonal cells, some containing data charts and graphs. The overall theme is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SCANNING

4G보다 10~100배 빠른 5G가 온다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인 '평화의 비둘기' 퍼포먼스 장면. 5G 통신망을 통해 LED 촛불의 동작을 원격으로 제어했다.

이동통신 기술은 1981년 1세대(G; Generation) 이동통신이 첫 상업 서비스에 들어간 이후 대략 10년마다 새로운 세대로 진화했다.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이동통신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개발을 기점으로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에 쏟아지는 관심도 커졌다. 특히 5G 이동통신을 향한 기대감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높아 보인다. 5G는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프로메테우스의 불'로 불린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혹은 서비스가 5G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5G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된다.

5G의 최대 전송속도는 20Gbps다. 2.3GB 영화를 1초 만에 받을 수 있는 속도다. 물론 이는 이론상의 숫자이고 망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자원을 나눠 쓰기 때문에 체감 전송속도는 100~1,000Mbps 정도가 된다. 그래도 체감 전송속도가 최대 10Mbps인 4G와는 10~100배 차이가 난다.

5G는 초고속의 특성 덕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돌보였던 타임 슬라이스 기술은 100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영상을 찍어 정지 화면을 여러 각도에서 나눠 볼 수 있게 한 것인데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5G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러나 5G의 가장 큰 차별점은 초저지연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연 속도는 네트워크가 명령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려면 이 시간을 거의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연속도가 0.03~0.05초인 4G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를 달리다가 주변 교통상황을 감지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체 제동거리에서 81~135cm를 더 가 멈추게 된다. 만약 앞에 사람이나 나무가 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지연속도가 0.001초인 5G로 통신하는 차라면 불과 2.7cm 더 나갈 뿐이다. VR·AR 서비스도 실감 나게 만들려면 시선 변화에 따라 인간의 감각이 눈치채지 못할 수준의 반응속도로 화면을 바꿔줘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공장의 로봇, 도시를 둘러싼 각종 센서 등 수많은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 연결된 기기들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재료가 된다. 5G는 4G의 10배인 km² 당 100만개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이런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가능케 한다.

5G는 통신망의 에너지 효율도 높다.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4G의 100분의 1로 줄어든다.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2020년 204억개로 현재보다 두 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G는 '녹색 통신'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된다.

5G 시대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고 올해 6월 주파수 경매를 거쳐 내년 3월 세계 첫 5G 상용화에 도전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20년 5G 표준을 공식 승인한다. 이를 앞두고 주요국과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표준이 채택되도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로 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했듯이 5G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길 바란다. ■



주영재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jjy@kyunghyang.com

기술 혁신의 확산 위한 플랫폼이자 산업 간 융합 촉발하는 인프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필자의 눈에 인상적으로 비친 장면은 주인공인 다섯 아이가 '미래의 문'을 통해 미래 세상과 조우하는 것이었다. 미래의 우리는 의사가 돼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로봇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고, 누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며, 아이돌 스타가 된 아라는 자신의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전 세계에게 선보인다. 해나래는 완전자율자동차가 다니는 스마트도시를 설계하고, 비체는 스마트 기술로 한글을 가르친다.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제공하는 역대 최초·최고의 ICT 올림픽임을 알리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비전을 세계에 광고한 것이다.

5G 이동통신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4G의 차세대 기술로, 이전 세대의 이동통신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전 세대의 기술 진화가 무선의 전송 속도를 강조하는 '초고속' 특징에 국한했다면, 5G는 초고속뿐 아니라 다양한 다수의 기기를 상호 연결하는 '초연결'과 통신 기기 간 안전한 연결과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하는 '실시간'의 중요성을 함께 지향한다는 점이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과 홀로그램에 요구되는 대용량 콘텐츠의 원활한 송·수신, 자율주행자동차 및 원격의료에 요구되는 안전한 통신 기술 및 인간의 촉각 반응에 버금가는 초저지연의 빠른 응답속도, 그리고 공장과 도시의 수많은 센서가 동시에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도시의 초연결성을 5G 이동통신이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갖는 서비스들을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 기능을 사용해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로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5G 기술은 기술 혁신의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존 이동통신산업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 간 융합까지 촉발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인프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G 기반의 통신 인프라는 기존 정보 전달 중심의 인프라에서 탈피해 정보 생성, 전달, 저장 및 처리까지의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능화된 ICT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의제로 다뤄진 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기술 혁신에서 촉발돼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장기적 경제성장을 의



지난해 5월 30일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콩그레스 센터 함부르크(CCH) 쇼룸에서 한 남성이 홀로그램 피라미드로 구현된 새로운 CCH 건축 디자인을 촬영하고 있다.

미하는 '산업혁명' 용어의 뜻에 따르면 네 번째 기술 혁신에 의한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미래 전문가들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네 번째 기술 혁신이 인류사에 새로운 대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와 같은 이해와 예측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는 5G 기반의 ICT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선점한 회사들이 있는 해외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를 5G로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면, 우리에게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할 기회가 올 것이다.

17일간의 짧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정에서 세계인들은 우리나라의 준비된 5G 기술 역량을 목격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 압도적 출발에 성공한 5G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과 타 산업 간의 융합 기술을 지속 발굴해 다양한 국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5G는 우리의 경쟁력이다. ■



홍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5G사업전략실장
iptvguru@et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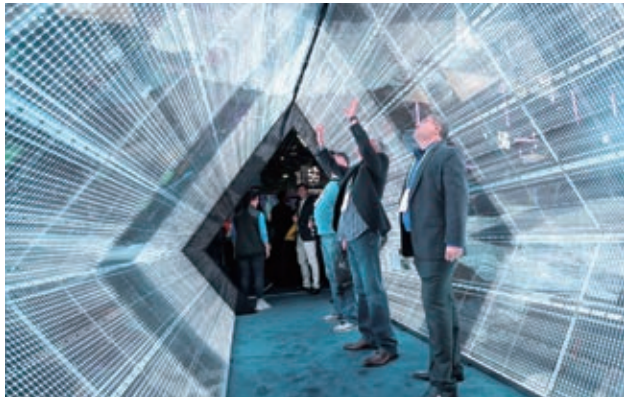
따로 또 같이... '세계 최초' 타이틀 건 전쟁 중

5G 세계시장은 2026년 1조달러(1천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국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다. 일찌감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모두가 2020년 이후 상용화를 예상할 때 이를 2019년으로 1년 이상 앞당겼다. 이통사 덕분에 5G 국제표준이 예정보다 일찍 나오기도 했다. 4G와 5G 혼합(NSA) 방식과 5G 단독(SA) 방식 국제표준을 함께 내놓으려던 국제기구(3GPP)를 설득해 4G·5G 혼합방식 국제표준을 지난해 12월 21일 승인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만약 이 작업이 실패했다면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계획은 시작도 전에 좌초했을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 5G 상용화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연말 조직 개편에서 SK텔레콤은 5G 전사 태스크포스, KT는 5G 사업본부, LG유플러스는 5G 추진단을 신설했다.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확보하면 9월부터 5G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한다. 5G 단말이 나오는 내년 3월 세계 첫 5G 상용 전파를 쏘아올리는 게 목표다.

해외 움직임도 활발하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으려는 각축전이 관전 포인트다. 미국 버라이즌은 올해 2분기 캘리포니아 등 5개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공한다면 한국보다 1년 가량 이른 5G 상용화다. 다만 완전한 이동통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와이파이처럼 한정된 장소에서만 무선을 제공하는 '고정형무선접속(FWA) 기술'이어서다.

AT&T는 올해 말 5G를 상용화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올해 안에는 5G 단말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중국은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3사가 7년간 1,800억달러(196조원)를 5G에 투자한다. 이통사가 정부 소유인 중국은 사실상 정부 주도로 5G를 도입한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5G 상용화 시점으로 정했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현지 이통사가 투자를 주도한다. 5G는 표준과 네트워크뿐 아니라 통신장비·칩셋·단말·서비스 등 '5G 생태계'가 성숙해야 산업이 발달한다. 노키아·에릭슨·화웨이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이 개막한 지난 1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의 인텔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5G 터널을 체험하고 있다.

이·ZTE·삼성전자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는 각국 이통사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다산네트웍스·에이스테크·코워버·유비쿼스 등 국내 장비 업체도 5G 투자에 거는 기대가 크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단말의 중요성이 커졌다. 국제표준 제정과 주파수 할당, 네트워크 투자 등이 이뤄진 후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는 5G 스마트폰 같은 단말이 필수기 때문이다. 퀄컴은 내년 1분기 5G 칩셋을 상용화하기로 했고, 이 칩셋을 적용한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도요타, 닌저, BMW 등은 5G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가상현실(VR) 등 콘텐츠 분야에서 5G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5G 상용화를 위해 경쟁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 처음 도전하는 기술이라는 점 등 협력할 이유도 많다. 한·미·일 정부와 기업은 '28GHz 이니셔티브'를 결성하고 28GHz 주파수 대역의 5G 주파수 표준 제정을 위해 협력한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AT&T, 에릭슨, 노키아 등은 '5G 글로벌 공동협력체'를 결성하고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



김용주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수석기자
kyj@etnews.com

“이런 것도 돼?” 손끝에서 이뤄지는 5G 세상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름다운 석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에 올라타 헤드셋을 착용하니 인공지능이 말을 건넌다. 물론 실제 도로를 달리는 건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차를 타면 어떤 모습일지 가상현실(VR) 기술로 구현해놓은 공간이다. 자동차가 스스로 시동을 걸고 출발하더니 음악도 골라 틀어주고 커피숍 앞을 지나갈 땐 음료 할인쿠폰이 도착했다고 알려준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분석해 저녁 메뉴를 추천하는 것도 프로그래밍돼 있다. 인공지능이 안내하는 대로 버튼을 눌러 미리 집 안 조명을 켜두기도 했다. 분명 자동차에 탔는데 운전엔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로 이동하면서 잡다한 개인업무를 처리하는 느낌일까.

부드럽게 달리던 자동차는 원래 가려던 길에 사고가 났다며 다른 경로를 찾았고, 큰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자 트럭 너머 도로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흠, 제법이군’ 하고 생각할 때쯤 화면에 빨간 불이 켜지며 급제동! 앞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물건이 쏟아지자 스스로 피해 도로가에 정차하더니 “많이 놀라셨죠?” 하고 탑승자의

컨디션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5G 기술이다. 5G의 특징인 ‘초저지연’은 통신 연결에서 지연이 거의 없는 응답속도를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주변 차량은 물론이고 신호등, CCTV 등과도 대용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장애물, 돌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이러한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의 5G가 필수인 것이다.

처음엔 VR 화면이 익숙하지 않아 어지러웠지만 금세 적응했고, 가상공간이나 멋진 풍경 속 다리 위를 달릴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감상하며 편안한 자세로 주행을 즐기게 됐다.

그렇게 자율주행차 체험을 마치고 도착한 스마트홈. 이 공간은 인공지능 스피커, 첨단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가전으로 구성돼 있다. 부엌에선 요리로봇이 좀 전에 차에서 고른 요리를 하고 있다. 파스타를 만들던 로봇이 마늘을 다 썼다고 알려온다. 주문하라고 이르면 자동으로 주문하고 드론으로 마늘을 배송받는 시스템이다. 집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고? 로봇이 요리하는 걸 구경하며 인공지능 스피커에 외쳤다. “아리아, 공기청정기 꺼줘.” “아리아, MBC 채널 틀어줘.”

기자가 체험한 곳은 SK텔레콤에서 마련한 5G 체험공간 ‘티움’이다. 가까운 미래에 ICT 기술이 가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현재관과 2047년을 배경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미래관(예약제)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체험관에서 선보이는 자율주행, VR과 증강현실(AR), 인공지능, 음성인식, 홀로그램, 헬스케어 등의 기술들 모두 초고속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앞으로 5G 기술이 더 발전하면 지금은 VR과 디스플레이 안에서 상상으로 구현되는 것들이 더 편리한 방식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SK텔레콤뿐 아니라 LG유플러스, KT 등 통신회사들은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5G를 알리는 다양한 체험시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막연하기만 한 5G 시대, 체험관에서 조금의 힌트라도 얻길 바란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볼 일이다. ■



자율주행차 체험 모습(위)과 스마트홈(아래)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해외사례: 중국

통신표준 선점이 전부가 아니다... 중국 5G 굴기에 숨은 이면

중국의 5G 굴기가 무섭도록 빠르고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2017년 11월 서브 6(6GHz 이하 주파수 대역)라 불리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선 표준 주파수를 공표하며 5G와 관련된 중국 내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5G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행보는 단순히 표준 주파수 공표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통한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중국 정부와 민간 사업자들 모두 혼연일체가 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13년 'IMT-2020 프로젝트'라는 5G 관련 국가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을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차이나 모바일을 비롯한 통신 3사, 그리고 화웨이나 ZTE 같은 거대 통신장비 업체에서부터 다탕 테크놀로지와 같은 국영 통신기술 업체까지 참여해 5G 표준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물론 재정적 지원은 필수이면서도 그 규모가 거대하다. 2013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는 2020년까지 7년간 중국 정부의 경우 5천억 위안(한화 약 85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통신 3사는 1,800억달러(한화 약 200조원)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하면서 5G 시대를 열기 위해 전력투구 중이다.

외국 기업에 자리 내준 3G 시대 지나

독자적 표준 채택한 4G 시대에 경쟁력 키워

사실 중국은 통신표준의 중요성과 산업 전반에의 파급력을 이미 직접 경험해봤다. 바로 우리가 4G라 부르는 LTE(Long Term Evolution) 시대에서다. 다른 나라보다 늦게 문을 연 3G시장은 말 그대로 외국 기업들의 놀이터였다. 통신 장비에서 단말까지 모든 것에서 중국 업체들이 철저히 배제된 시장을 바라보며 중국 정부는 4G LTE 시대에는 독자적인 표준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LTE 표준 중에 하나인 TDD(Time Division Duplex·시분할 이중 방식)-LTE를 중국 내 표준으로 삼으며, 마치 3G 시대에 중국의 완전 독자표준이었던 TD-SCDMA(Time Division Synchronous



지난해 11월 25일 차이나 모바일이 중국 광저우시에서 개최한 '글로벌 파트너 콘퍼런스 2017' 행사 현장(위)과 같은 달 19일 선전에서 열린 '제19회 하이테크페어'에서 관람객이 5G 비디오게임을 체험하는 모습(아래)

CDMA·시분할연동코드분할다중접속)를 계승한 듯한 이름인 TD-LTE로 발전시키게 된다. 그리고 당시 대세였던 FDD(Frequency Division Duplex·주파수 분할 이중 방식)-LTE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외국의 통신 장비나 단말 업체에 일종의 표준 장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시도는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네트워크 장비회사가 된 화웨이,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하나둘 갖춰가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 업체들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TD-LTE라는 중국 표준을 통해 통신표준의 중요성과 그 파급력을 충분히 학습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은 5G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5G는 단순히 LTE 대비 통신 속도만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5G를 통해 2030년까지 약 1,07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일자리 약 600만개,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493조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액수에는 5G 자체를 통한 경제효과도 포함되지만 중국 정부는 이보다 훨씬 크고 지속 가능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바로 만물이 5G에 연결되고 이를 통해 모든 중국인들이 보다 편한 삶을 누리는 세상, 바로 샤오캉(小康) 사회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팩토리, 그리고 스마트홈과 같은 사물인터넷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정부 주도 아래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를 사물인터넷 표준으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중국 주요 도시의 공공시설에 20만개 이상의 NB-IoT를 지원하는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 150만개 이상의 NB-IoT 인프라를 추가할 예정이며 6억개 이상의 M2M(Machine to Machine) 연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5G·사물인터넷·시스템반도체 연계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세계시장 겨냥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상하이에서 열린 MWC(Mobile World Congress)의 주요 화두는 당연히 NB-IoT를 통한 스마트 세상이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국 통신 3사는 앞다퉈 공공 주차에서부터 시설물 관리, 대기 측정, 교통 및 도로 관리, 강이나 하천 같은 물 자원의 관리까지 다양한 종류의 NB-IoT 제품들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로 5G를 소개하며 왜 중국에서 5G 기술개발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으나 최근 주춤해지고 있는 중국의 제조경쟁력을 5G를 통해 끌어올리고 제2, 제3의 샤오미를 키워내려 하고 있다. 새로운 통신표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5G 시대는 앞선 통신 시대와는 달리 모든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될 것이고 이를 위해선 통신기능이 들어간 사물인터넷 제품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심천 등을 중심으로 중소 규모의 제품 개발 및 생산 업체 수백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화이트 박스라 불리는 스마트폰이나 피쳐폰을 만들어주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값싼 전자제품 등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5G와 사물인터넷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복잡하지 않은 사물인터넷 제품들을 개발하거나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무기인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중국시장과 글로벌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안에는 중국 정부가 키우고 싶어 하는 숨겨진 산업이 또 있다. 바로 반도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SoC; System on Chip)는 사물인터넷을 만드는 데 필수 요소다. 중국 중소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해외 업체의 사물인터넷 패키지가 아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의 시스템반도체와 통신 패키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로 이 부분이 중국 정부가 5G와 사물인터넷, 그리고 시스템반도체를 핵심 사업이자 상호 간 상관관계를 갖고 키우려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민간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국영 통신기술 업체, 통신장비 업체에서부터 중소 사물인터넷 제조사, 마지막으로 시스템반도체 업체까지 중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국 5G 전략의 숨겨진 이면이다. 단순히 통신 선진국이나 통신표준 선점이 아닌 만물을 모두 연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산업을 모두 중국의 품으로 가져가려는, 궁극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글로벌시장에 뿌리며 중국 업체들의 제조경쟁력 또한 동반해서 키우려는 것이 중국이 생각하는 5G의 세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중국이 꿈꾸는,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며 잘사는 복지국가인 ‘샤오캉 사회’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



최형욱 핀란드 무역대표부 ICT 수석사무관
alex.choipb@gmail.com

6월 주파수 경매 실시하고 하반기 5G 융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시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제2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동통신 표준화회의'를 열고 5G 국제표준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회의 첫날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G는 LTE(Long Term Evolution) 등 이전 세대 이동통신 대비 단순히 통신 기술의 업그레이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G는 이동전화 단말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디바이스를 연결시켜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5G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 주요국과 기업은 5G 기술개발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G 이동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지난 12월에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올해 5월에 5G용 주파수 경매계획을 마련하고 6월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급 이후 네트워크 구축, 단말기 개발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2019년 상반기 중에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네트워크 관련

제조업체는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 삼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G 주파수는 고주파 대역에 위치해 LTE 등 이전 세대 이동통신에 비해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5G망이 초기에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로, 전주 등의 통신망 기반설비를 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와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시범사업(2018년, 274억원)도 추진한다. 5G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투자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다시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입 초기단계에 5G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는 앞으로 5G의 성공적 전개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험망을 기반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몰입형 동계 스포츠 체험 서비스, UHD 초고화질 경기 중계 등을 통해 5G의 가치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5G는 이동통신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타 산업의 혁신을 유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서 제시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5G가 만들어낼 가능성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장 serendipity1@korea.kr

5G, 4차 산업혁명의 신경망...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과 규제 완화를

이 글이 활자화될 무렵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5대 목표 중의 하나인 'ICT 올림픽'이 충분히 달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 개시라는 로드맵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몇 년 전 5G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 자세를 보이던 세력들이 기술, 표준, 시장에 대한 위협도가 어느 정도 사라진 지금 저마다 실리를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하기 위해 염두에 뒀야 할 점들을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5G 연계 융합산업 협력계획 수립이다. 유럽은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초기부터 5G를 'More than Mobile Communication'으로 정의하고, 연계해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 수직산업으로 차량·에너지·공장·의료·미디어 산업 등을 제시해왔는데, 이 외에 스마트시티, 공공안전, 차세대 철도·선박 등도 고려될 수 있다. 5G와의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잠재적 시장으로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에너지 등의 분야가 더 크기는 하나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반면, 당장 협업에 착수할 수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될 것 같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강력한 서버에 기반한 외부 인공지능의 지원 없이는 복잡한 차량 내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세대 통신과의 융합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다만 5G가 수직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고 촉매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의 파트너라는 것을 끈기 있게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수단의 하나로 범부처·범산업 공동 연구개발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의 신경망으로서 5G를 인식하는 것이다. 산업



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도로망은 혈액, 에너지망은 근육, 통신망은 신경이 되고 인공지능은 두뇌로 볼 수 있는데, 통신망의 역할은 도로망과 에너지망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저임금에 기반한 인구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없으므로, 5G 및 그 진화 기술의 개발이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수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는 정부정책 차원의 대응이다. 정부는 비

즈니스의 미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적어도 한시적으로는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G 시대의 디바이스로는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3G·4G 시대와 비교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자들의 과도한 망구축 시한 경쟁, 장비도입 가격 경쟁으로 국산 장비업체의 입지가 급격히 와해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정책, 장비 보안성 확보 정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규모는 작지만 국내 생태계 조기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시험인증산업, 초고주파 소재 및 반도체 공정, 보안체계 등에 대한 자립도 기반조성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5G의 파종부터 묘목으로 살리는 것은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지만, 큰 나무로 키워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노력과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진정한 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이현우 단국대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
5G Forum 대외전략위원장
woojaa@dankook.ac.kr

김희삼의 인적자본론

경제학자, 교육연구자, 교육자의 시선에서 생생한 교육현실을 들여다보고,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해본다.



‘다이내믹 코리아’와 ‘수저계급론’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던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 반대 글의 일부다.

가상통화 투자는 ‘수저계급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만 하면 수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2017년에 연중 최고 20배까지 뛰었던 비트코인의 하루 세계 거래 중 21%가 한국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유독 높았던 것은 그만큼 가상통화 단타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한국인의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외의 다른 가상통화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거래액의 30%가 국내 거래액이었다. 특히 가상통화 투자자

의 60%인 180만명이 20~30대였을 정도로 컴퓨터에 익숙하고 다른 희망은 없는 청년층 일부에게 잠시나마 꿈을 꾸게 했다.

韓 대학생 절반, 성공요인 1순위가 부모의 재력이라고 인식

필자는 2017년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개국 대학생 각 1천명씩, 총 4천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성공요인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귀국에서 지금 청년들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재능, 외모, 성격, 노력, 부모의 재력, 인맥, 우연한 행운 중에서 3순위까지 골라 주십시오.”

〈표〉에서처럼 한국 대학생의 절반은 청년의 성공요인 1순위가 부모의 재력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수저계급론적 사고는 다른 3개국 대학생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 대학생은 재능을 1순위로, 미국 대학생은 노력을 1순위로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들 3개국에서 부모의 재력은 2, 3순위로도 지목되는 빈도가 낮았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에게는 청년의 성공요인 2순위 역시 수저계급론과 관련된 인맥이었고, 재능은 3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목됐다. 노력은 중국과 일본 대학생에게는 2순위로 많이 지목됐으나, 한국 대학생에게 노력은 3순위에서도 최빈 지목대상이 아니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1996~2015년에 매년 퍼낸 자산 10억달러(1조2천억원) 이상의 억만장자 명단(2015년에 70개국 1,826명, 한국은 30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세습형 부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억만장자 중 창업 등 자수성가형 부자가 아닌 상속형 부자의 비율(세계 평균 30.4%)은 한국 74.1%, 미국 28.9%, 일본 18.5%, 중국 2%로 4개국 중 한국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한국 청년의宿命론적 인식이 가상통화 열풍과 규제 반대 국민청원의 한 배경이 됐을 것이다. 어쩌다 청년들에게까지 계층상

〈표〉 자국 청년들의 성공요인에 대한 4개국 대학생의 인식 (단위: %)

	재능	외모	성격	노력	부모의 재력	인맥	우연한 행운	계
한국 1순위	22.1	4.1	2.2	9.5	50.5	9.9	1.7	100.0
중국 1순위	45.3	7.9	10.1	12.9	12.5	10.2	1.1	100.0
일본 1순위	35.4	8.7	11.3	23.2	6.7	8.9	5.8	100.0
미국 1순위	22.9	9.9	15.1	23.4	12.1	15.3	1.3	100.0
한국 2순위	18.2	8.3	5.0	12.6	17.1	33.5	5.3	100.0
중국 2순위	17.9	8.5	16.4	25.5	11.4	18.8	1.5	100.0
일본 2순위	18.4	13.2	17.1	22.8	8.6	14.2	5.7	100.0
미국 2순위	15.4	6.4	20.2	22.4	9.9	23.6	2.1	100.0
한국 3순위	23.1	14.8	6.8	21.6	8.3	14.7	10.7	100.0
중국 3순위	14.2	5.7	18.1	21.4	8.7	23.0	8.9	100.0
일본 3순위	15.0	9.3	17.2	16.2	6.9	19.5	15.9	100.0
미국 3순위	17.5	8.9	18.3	18.6	6.9	20.8	9.0	100.0

자료: 필자가 2017년 8~9월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의 글로벌 패널을 통해 조사해 작성

승의 동아줄이 인적자본 투자가 아니라 가상통화 투기가 됐을까?

한국은 과거 압축적 경제성장과 함께 남미 등에 비해 양호한 소득 분배를 보였었고,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였듯 일간지 사회면에는 개천 용에 비유되는 성공 사례가 드물지 않게 실렸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고 정보화에도 발 빨랐던 자타인정 '다이내믹 코리아', 세계은행이 '동반성장(shared growth)'의 모범국으로 치켜세웠던 한국이 어떻게 수저계급론에 눌린 사회가 됐을까?

우선 계층 대물림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림>을 보자. 현재 한국의 중장년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관계수) 정도는 당대(아버지와 본인 간)에는 전대(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후대(본인과 아들)에 와서는 다시 대물림 정도가 높아진 모습을 보여 세대 간 계층 세습이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된 V자형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다이내믹 코리아, 즉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상승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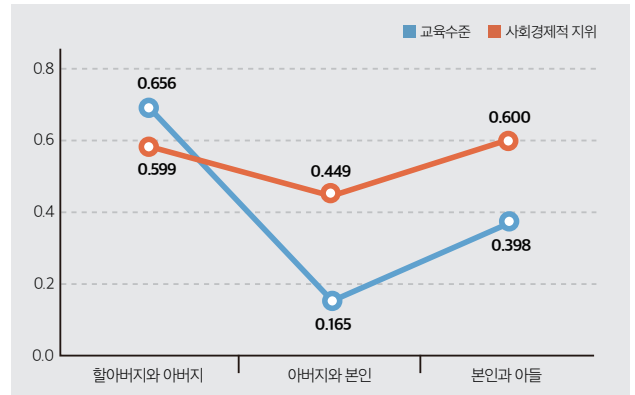
먼저 역사적 환경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전근대적 신분제가 해체되고 미군정이 능력주의 인사관행을 도입해 과거로 치면 천출의 자식도 근대교육을 받으면 부모와 다르게 살 수 있었다. 특히 지주제를 해체한 농지개혁은 농지 소유 불평등을 개선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농지 소유에 3정보(1정보는 약 3천평)의 상한을 뒤 농가의 생산조건 차이가 격감했다. 더욱이 한국전쟁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소실은 경제개발 전 단계의 자산 분배를 매우 평등하게 만들었다.

세대 간 계층 대물림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

경제 환경도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대부분의 국민이 빈농이었던 환경에서 1960~1970년대 진행된 수출주도형 공업화는 제조업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고 수많은 농촌 청년들을 도시로 유인했다. 고용 창출을 동반한 고도성장은 성장의 과실이 고용을 통해 분배되는 낙수효과를 보여줬다. 정부가 곡물의 수매가격보다 방출가격을 낮게 책정한 이종곡가제는 농가소득과 도시노동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3저 호황에 따른 유희노동력 고갈과 노동운동 고양으로 실질임금도 상승했다.

사회 환경에서는 교육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에 필요한 중위수준의 인력 공급을 위해 공교육 확대에 우선 투자해 초·중·고 취학을 단계적으로 크게 높여나갔다. 40여년 전 초

<그림> 한국의 세대 간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계수 추이



주: 교육수준은 학력별 교육연수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해당 가족이 중년(40~50대)인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전체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위치로서 응답자가 10점 척도로 평정한 수치를 나타냄.
자료: 'KDI 행복연구 2013' 자료(남성 응답자 1,525명 표본)를 이용해 필자가 계산함.

등학교에 입학한 필자의 기억에도 콩나물시루 과밀 학급으로 2부제 수업을 했지만 학교에 못 간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 또한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로 아끼던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낸 사연이 많아 한국의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 대신 '우골탑'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추천 배정, 1974년 이후 진행된 고교 평준화, 1980년대의 사교육 금지 조치는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이 시기의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은 세대에서 계층 대물림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하락하는 조건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도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개방경제체제로의 전면적 이행을 경험했다.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금융화가 진행되고 노동절감적 기술이 도입되면서 제조업 노동의 입지가 약화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행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및 연쇄폐업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흔을 남겼다.

경제 환경 면에서도 개방에 따른 이득은 수출대기업과 늘어난 유동성이 부풀린 자산가격 프리미엄을 향유하는 자산소유층에 집중됐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는 소득분배 개선 추세가 멈추고 양극화 조짐이 나타났다.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커져 이중구조가 심화됐으며, 사회 초년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미생'들이 늘어났다.

특히 중국의 본격화된 산업화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교역재의 세계 가격을 낮췄으나 한국의 해당 제조업에는 치명적이어서 노동자

퇴출이 일어났다. 과거 한국의 농촌 유휴인력을 도시 제조업이 흡수하던 시절 잠자던 중국경제가 깨어나면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 고도성장은 마오쩌둥의 덕을 보다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 의해 종식된 꼴이라는 촌평도 과히 틀리지 않다. 기술 모방과 저비용 양산 위주의 요소투입형 외연적 성장체제가 수출 무대에서 훨씬 크고 강력한 추격자를 만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진보를 통해 혁신주도형 내생적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이룰 만한 역량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존재 등 요소 활용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한국경제에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필연적이었다. 더욱이 수출제조업의 아웃소싱 및 자동화의 확대는 과거 제조업의 고용 확대가 중심이 됐던 낙수효과의 약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도래를 의미했다. 퇴출 노동자와 명퇴자가 끊임없이 몰려드는 저수지인 영세자영업은 낮은 생산성과 과잉팽창으로 구조적 몰락이 예견돼 있었고, 이는 중산층 붕괴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속화했다.

사회 환경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던 소득불평등도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추세가 바뀌고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급등하면서 계층 간 대물림이 강화될 조건이 형성됐다. 실제로 국가별 지니계수와 세대 간 소득탄력성(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소득이 높은 정도) 간의 비례관계(이른바 '위대한 개츠비 곡선')는 주로 소득불평등이 교육투자의 격차를 통해 다음 세대의 소득불평등으로 재생산되는 경로로 설명되고 있다. 2000년 4월 사교육 금지 위한 판결과 대학원을 나온 고학력 청년의 창업 분야 1순위(44%)가 교육서비스업일 정도로 팽창한 학원사업은 2000년대 들어 확대된 소득불평등과 맞물리면서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2016년 기준 월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는 100만원 미만 가구의 8.9배를 지출했다.

저마다의 재능과 노력에 기반한 꿈을 갖고 사는 사회로...

사회 이동성 복원 중요해

대학입시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상승 욕구와 계층유지 욕구가 충돌하는 전장이다. 과거에는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출신이나 어려운 집의 학생에게도 명문대 입학의 기회가 꽤 열려 있어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사투리와 옷차림으로 지역적·계층적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교육 사다리의 상징이었던 명문대 입학은 갈수록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의 차지가 돼가고, 그런 고등학교에 가려면 아주 일찍부터 치밀한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됐다. 입학사정관제도(학생부종합전

형) 등 기존의 획일적 점수 경쟁을 탈피해 학생의 적성과 잠재력으로 선발한다는 수시전형 비율이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상승해온 가운데, 이것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불공정한 전형방식이라는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양한 수시전형과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중에 무엇이 교육 사다리에 조금이나마 가까운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교수가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세대, 불평등과 격차를 비판하지만 자녀 입시를 위해서 대치동에 집을 구하는 세대가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학 진학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을까? 저학력 대비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런데 대졸자 공급이 급증한 2000년대에 들어 4년제 대학 출신의 20%, 전문대 출신의 50%는 고졸 평균 미만의 임금을 받게 된 데 반해 명문대 임금 프리미엄과 고액 연봉이 증가하는 등 대졸자 내에서도 임금의 양극화가 진행됐다.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조기화된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한국은 압축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교육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 젊은 세대 중 상당수가 후대에 씨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헬조선'이라는 별명을 붙인 나라가 됐다. 청년들이 가상통화 투자 대박처럼 신기루 같은 꿈이 아니라 저마다의 재능과 노력에 기반한 꿈을 갖고 사는 활력 있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미 길이 길어진 여기에 그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풀어놓을 요량은 아니다. 대신 필자와 동갑내기인 어떤 판사가 학창 시절 한국사와 중국사를 공부하면서 수천년간 국가(왕조)의 발전기와 패망기에 나타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을 인용하며 사회 이동성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발전기의 특징은 균등분배를 지향하는 토지개혁, 귀족의 세 부담 증가, 국가 직영 최고 교육기관 확대 및 공정한 과거제도를 통한 신진 엘리트의 등용에 있다. 패망기의 특징은 소수 귀족의 토지 사유화 증가로 인한 대농장화, 백성의 각종 세 부담 증가, 귀족 자체 중심의 사학 증가, 고위 관리 자제를 특채하는 문음, 음서제도 확대를 통한 지배계급의 세습 구조 공고화, 과거제의 붕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병리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사회적 불만이 극에 달해 민란이 일어난다.”(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개천의 용들은 멸종되는가' 중에서) ■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KDI 겸임연구위원
hisamkim@gist.ac.kr

스트레스 없이

품위유지비 줄이는 방법



품위유지비는 대표적인 변동지출로 꼽힌다. 마음먹기에 따라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가계부에 구멍을 내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작은 사치'를 즐기는 요령이 필요하다.

우리 부부의 월평균 품위유지비는 15~20만원이다. 의복비, 미용비, 세탁·수선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외투 한 벌만 사도 수십 만원은 우습게 나가는 요즘, 오히려 싱글 때보다 지출이 배 이상 줄었다. 무조건 쇼핑을 참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구입하되 평소엔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다.

먼저, 광고 차단하기. 나는 스마트폰에 시시때때로 날아드는 광고나 이벤트 알림을 접할 때 쇼핑욕구를 가장 참기 어렵다. 일하고 있다가도 스마트폰 화면에 갑자기 등장하는 예쁜 모델언니를 보면 무언가에 홀리듯 쇼핑물에 들어가게 된다. 한 20분쯤 신나게 장바구니에 옷을 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날 잡고 쇼핑물에서 날아오는 모든 광고를 차단했다. 쇼핑물 앱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했다. 그랬더니 쇼핑물에 접속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생활비 지출도 덩달아 줄었다.

둘째, 아웃렛을 이용할 땐 상품권 활용하기. 우리 부부는 백화점 대신 아웃렛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아웃렛 위주로 쇼핑한다. 상품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10~15% 저렴하게 거래될 뿐 아니라 종종 소셜커머스에서 특가에 판매되기 때문이다. 아웃렛이 백화점보다 30% 이상 저렴한데 상품권으로 추가할인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40~50% 이상 비용을 아끼는 셈이다. 인근에 아웃렛이 있는지,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지 체크해보자.

셋째, 부부가 격월로 돌아가면서 쇼핑하기. 월 예산 15만원에 맞춰 한 달에 지출이 물리지 않도록 격월로 한 사람씩 사는 것이다. 딱히 필요한 물건이 없다면 한 달 건너뛰고, 비교적 큰 지출이라면 2~3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출한 뒤 매달 할부금을 지출로 잡아놓는다. 사야 할 물건이 여러 개라면 두세 달에 걸쳐 하나씩 구입한다. 당장 필요한 물건을 1순위로 사고, 2순위 이하 물건들은 한 달에 하나씩만 산다는 생각으로 추린다. 이 중 몇몇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잊히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회원권은 사지 않기. 정액제 회원권은 1회 서비스 비용보다 평균 단가가 저렴해 훅하기 쉽다. 예를 들어 젤 네일의 1회 비용은 2만원이지만 네일숍 회원권 10만원을 끊으면 추가로 1~2만원의 적립금을 더 받는 식이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회원권은 절대 저렴하지 않다. 처음엔 10만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가격에 주춤하지만 이후부터는 감각이 무뎠다. 오히려 회원권이 더 저렴하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서비스를 추가하고, 한 달에 한 번 갔던 네일숍도 2~3주에 한 번 가게 된다. 네일케어를 받을 때마다 2만원씩 지불하는 것과 한 번에 10만원을 내고 나머지 5~6번을 공짜인 것처럼 다니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고 바로 쓰는 것이 지출 통제에 효과적이다.

스트레스 없이 품위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 사고, 안 입고, 안 꾸미는 방법론 한계가 있다. 이왕 하는 쇼핑이라면 즐겁게, 그리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사소한 팁을 활용해보자. 품위는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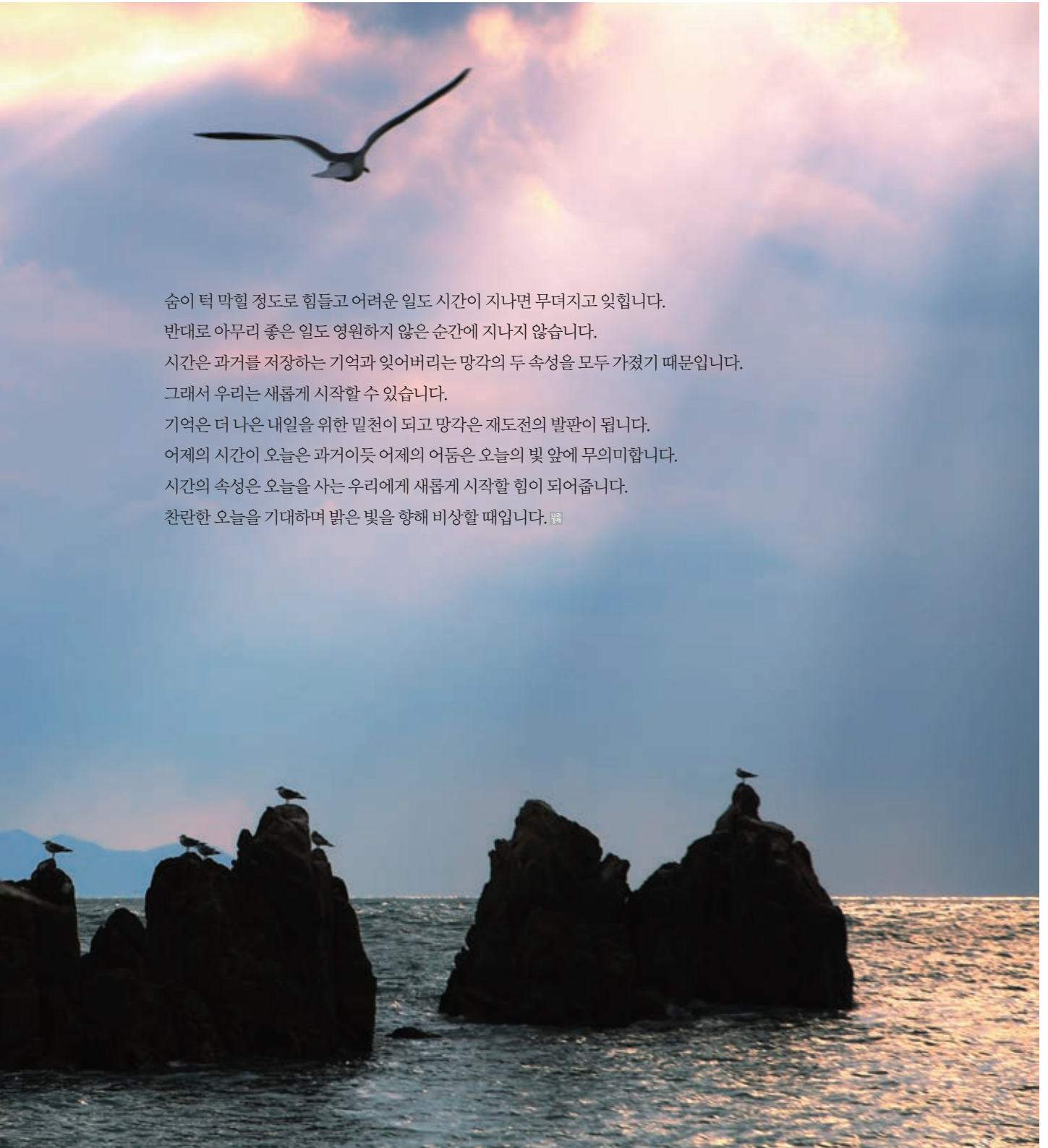


구채희 「푼돈아 고마워」 저자
hnzzang486@naver.com

싱글 시절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1억원을 날리는 인생의 쓴맛을 본 후 재테크에 눈을 뗐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즐겁게 돈을 모으는 결혼 2년 차 열혈 새댁. 증권사에서 재테크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시간의
속성 —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더지고 잊힙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과거를 저장하는 기억과 잊어버리는 망각의 두 속성을 모두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천이 되고 망각은 재도전의 발판이 됩니다.
어제의 시간이 오늘은 과거이듯 어제의 어둠은 오늘의 빛 앞에 무의미합니다.
시간의 속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이 되어줍니다.
찬란한 오늘을 기대하며 밝은 빛을 향해 비상할 때입니다. 박문정

글·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장소: 홍도

경제학 소블리에

일반인들이 흔히 궁금해 할 만한 사회현상을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블리에'처럼 섬세하게 감별해 소개한다.

스크린 독점과 차별적 상영배정



김두열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duolkim@mju.ac.kr

2009년 연말 개봉된 영화 <아바타>는 1,2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지금까지 개봉된 외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이 찾은 작품으로 기록됐다. 이 영화는 개봉 초기 거의 1천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됐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많은 다른 영화들은 상영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에서는 스크린 독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를 더 상영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의 한 사례다.

상영관 상위 3사가 전체 스크린의 92% 차지...

제작비 낮은 영화일수록 차별적 상영배정

한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절반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영화의 품질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상영관의 독과점적 구조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의 92%는 상영관 상위 3사가 지배하고 있다. 배급사는 스크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여러 극장주들과 협상할 필요 없이 대형 상영관 기업과만 계약을 맺으면 된다.

둘째는 이 상영관 상위 3사가 모두 배급사 또는 제작사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상영관 3사는 자신이 보유한 배급사 영화에는 유리하게 상영배정을 해주고, 경쟁배급사 영화에는 상영배제를 하는 차별을 할 수 있다. 많은 영화산업 관련 인사들은 상영관 3사가 차별적 상영배정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배급사 영화의 흥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더 좋은 영화들이 상영될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영화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상위 3사는 이러한 비난이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실제 존재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왜 이런 정책을 쓰는지에 대해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리고 대부분 상영관 3사가 다른 배급사에 비해 자신의 배급사 영화에 더 많이 상영배정을 해준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의 흥행성과 상영관 간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게 된다. <아바타>처럼 흥행성이 높은 영화에도 차별적 상영배정이 이뤄지는 것일까? 예를 들어 상영관 3사와 관련이 없는 배급사가 <아바타>를 수입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정보는 이 영화가 크게 성공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상영관 3사는 자신의 계열사가 수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바타>와 같은 대작의 상영을 거부할까? 이러한 추론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단순히 그런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질문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화가 블록버스터급이 아니면 중저예산을 들인 보통 규모의 영화냐를 구분해 스크린 독과점이 미치는 여부를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경쟁사의 영화시장 진입 제한 vs 원활한 자금공급 이뤄져 블록버스터급 영화 탄생 가능

최근 정필문(성균관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제작비에 따라 스크린 배제 현상이 있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을 외화로 한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영화의 경우는 신뢰할 만한 제작비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정필문의 분석에 따르면, 제작비가 낮은 영화일수록 차별적 상영배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저예산 영화의 경우 상영관들은 자신의 배급사 영화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더 많은 상영배정을 해주고 있었다. 반면 고예산 영화일수록 배급사별 차별적 상영배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비와 차별적 상영배정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경쟁배급사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상영배제하면 그만큼 관객을 잃는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타 배급사의 저예산 영화는 더 적

은 기회비용을 치르고도 손쉽게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제작비가 낮은 영화시장에서만 차별적 상영배정 행위가 발생한다고 스크린 독과점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별행위는 새로운 경쟁사의 영화시장 진입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새로 진입하는 영화사는 기존 영화사에 비해 자금력과 영화제작 경험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화사는 상영기회의 박탈로 한두 번만 흥행에 실패해도 영화산업에서 퇴출될 것이다. 경쟁자가 줄어들면 결국 시장은 독과점화되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공정경쟁뿐 아니라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스크린 수는 제한적이기에 한 영화에 과도하게 스크린이 집중되면 그만큼 다른 영화의 상영기회가 줄어들고, 관객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영화를 제작하는 예술인들에게 스크린 독과점은 더욱 큰 벽으로 와닿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예술영화가 극장에 상영되는 경우도 더욱 줄어들 것이다. <워닝소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같은 작품이 극장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정책당국이 개입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화산업에서 수직결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배급사와 수직결합된 상영관이 다른 독립상영관에 비해 영화를 더 다양하게 상영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상영관과 배급사의 수직결합으로 인해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져 <명량>과 같이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탄생했다는 주장도 있다. 중저예산 영화에 대해서만 차별적 상영배정이 존재하니 상영관 3사의 계열사들이 중저예산 영화를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중저예산과 고예산을 구분할지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이처럼 영화산업 구조, 공정경쟁, 문화적 다양성, 기획의 공정성, 소비자 선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매년 어김없이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형적인 판단보다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이 중요한 까닭이다. ■

참고문헌

- 정필문, 「제작비 규모에 따른 차별적 상영배정」, 『경제학연구』, 제65권 제4호, 2017, pp. 85-128.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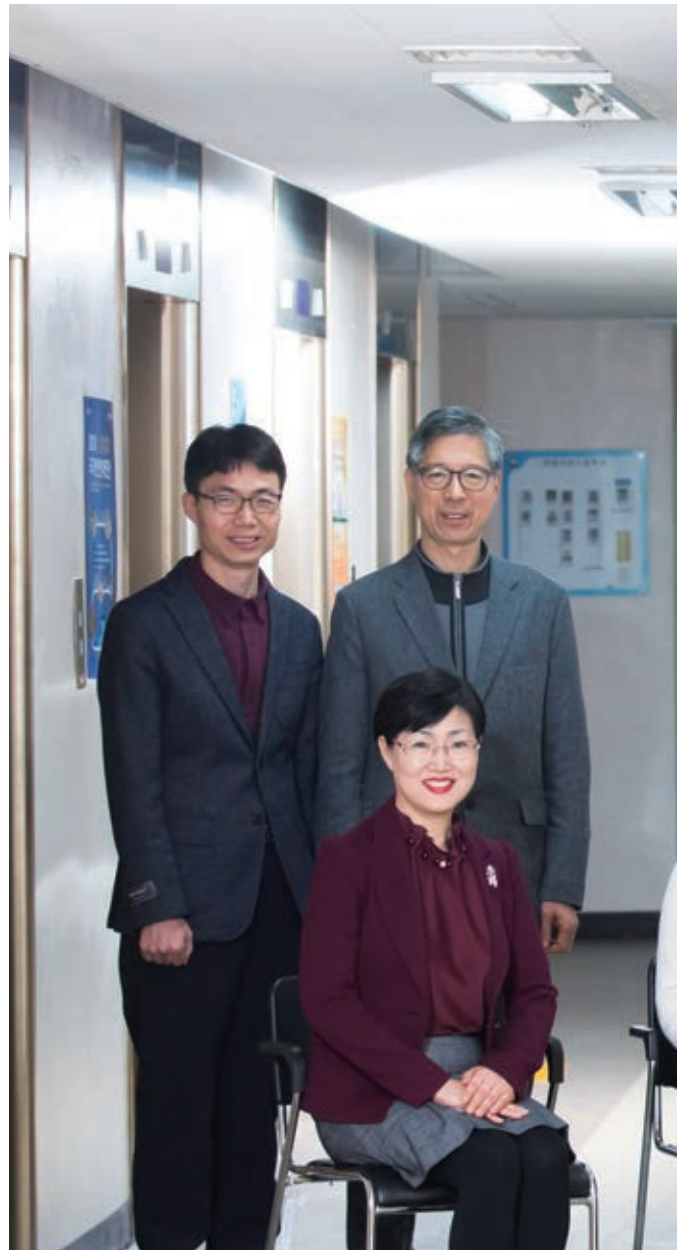
‘정보공개’를 넘어 ‘정보공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는 2017년 7월 기존 공공정보정책과에서 공공데이터와 별도로 정보공개를 분리해 신설된 부서다. 과 명칭으로 ‘정보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정보공개, 공문서와 정책실명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이하 온-나라시스템) 등 크게 3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필수 기반이 된다.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정보공개시스템 2019년까지 구축

먼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 비공개 등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제도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업무다. 소관 법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두고 있다.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1998년 1월 시행된 이래 20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국민, 시민사회와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했다.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넘어 정보를 공유하자는 새 정부의 의지와 열린 혁신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지난 12월에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양명석·고준석 사무관, 손중우 주무관은 가능한 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옴부즈만·일반시민 등의 주장도 들어야 하고 공개를 꺼리는 소극적인 조직문화와 정보공개제도를 오남용하는 과도한 청구와 민원도 극복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한다.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서비스통합추진



정영근 사무관, 나은균 주무관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공개포털은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공공 정보를 찾고 청구하는 인터넷사이트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2,60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연계돼 있다. 올해는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반영하는 정보공개포털 BPR(업무재설계)/ISP(정보전략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신기술 기반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남주·김푸르나 사무관, 김선순 주무관이 담당하는 공문서와 정책실명제는 모든 공공기관의 문서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의 주

요 정책에 대해 입안에서부터 결재까지 실명제로 관리함으로써 행정효율과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업무로, 소관 법령으로는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를 국민의 뜻에 맞게 새롭게 개편해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1998년 7월부터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 공개되는 사업의 경우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민원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당초 도입 취지를 살려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실명제를 리모델링한다.



(왼쪽부터)

1. 김선순 주무관, 김푸르나 사무관, 김남주 사무관, 장동수 과장
2. 정영근 사무관, 나은균 주무관, 고준석 사무관, 양명석 사무관, 손중우 주무관
3. 서정범 주무관, 문윤아 사무관, 박선 사무관

새로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기관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에서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

명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의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26개 중앙부처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마지막으로 ‘온-나라시스템’은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문서처리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윤은옥·문윤아·박선 사무관, 서정범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등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공무원의 하루 업무는 온-나라시스템을 켜면서 시작되고 끄면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업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정책과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2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클라우드(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자원 통합·공유 서비스) 기반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각 기관별로 보고서 및 문서를 저장·보관하는 기존 방식에서 통합저장소(클라우드)에서 공동 기안·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책이나 제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정책과 역시 업무압박이 크고 어려움이 많다. 응대해야 하는 고객들이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아주 다양해 내·외부 민원도 상당하다. 하지만 과원들 모두 출중한 능력과 좋은 성품으로 묵묵히 국민만을 바라보며 바쁘게 일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 민원을 담당하는 손중우 주무관은 우리 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2018년 1월 칭찬메아리상’ 수상자 3명에 당당히 뽑히기도 했다. 주변 동료들이 인정하는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 즐기와 가지, 뿌리가 있기 때문이듯 국민에게 유용한 정부의 정책들도 여러 기반 업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과 업무는 대내외적으로 선호나 각광을 받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부심이 힘든 가운데 저희를 지탱해주는 힘이 아닐까요.” 정보공개포털을 담당하는 나은균 주무관의 말이다. 정보공개정책과 과원들 모두 그런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

글·장동수 과장

마침내,
[나를 위한]
삶을 만나다



당신의 활기찬 「인생 3모작」 준비를 위해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함께합니다.

신중년 인생 3모작

인생 3모작 준비를 위한,
생애경로별 맞춤서비스 지원



: NOW



코스닥 활성화 스타트!

왜 지금 코스닥일까?

지수가 상승세에 있다고 당장의 투자가치만을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혁신기업의 투자와 회수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단순한 투자수익을 넘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가져오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싶어 지금 코스닥이란 화두를 꺼냈다.

『나라경제』에서는 코스닥 투자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이유를 들어보고 현재의 시장 현황, 정부 정책, 그리고 전문가 제언을 통해 숫자로 나타나는 지수 이면의 코스닥의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혁신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



코스닥지수가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한 지난 1월 16일 서울의 한 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개발기에 추진됐던 대기업 중심의 기업육성정책이 성과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구조의 성숙화와 함께 기업자본 축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상승 추세다.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면서 개별 경제주체의 효율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률의 제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경제성장률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는 기업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인구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적 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의 과점형태로 산업구조가 경직화돼 있다. 이 단계의 기업들은 안정된 수익의 창출을 통해 현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의 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다.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의 쇠퇴와 신산업의 태동을 야

기한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자본과 풍부한 모험자본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굴하는 작업에는 높은 수준의 사업위험이 수반된다. 성공했을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사업과 관련된 위험수준을 감안할 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은행에 의한 대출방식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방식이 비교우위를 갖는다. 부채성 기업금융은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보증과 같은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의 공급에 한계를 갖는다. 반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의 공급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최적수준의 자본공급이 가능하다.

모험자본시장은 크라우드 펀딩,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코스닥시장은 모험자본 공급 생태계의 최정점을 이루는 중요한 시장이다. 국내 M&A시장이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벤처캐피탈이나 PEF는 투자자금의 중요한 회수수단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활용한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공급했던 기존 자금을 회수해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선순환 과정의 중요한 매개체인 것이다.

결국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의 성장엔진 육성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장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neptune@kcmi.re.kr

정책 영향으로 상승세 보인다 美 금리인상 기조로 변동성 확대돼

연말연초 여의도 증권가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재테크를 하나 꼽자면 '코스닥 ETF(상장지수펀드)'를 고르겠다. 코스닥지수 상승이 수익률로 이어지는 상품인데, 특정 종목 투자가 까다롭거나 부담스러운 증권업계·언론계 종사자 등이 주로 돈을 넣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말 650.82로 마감한 코스닥지수와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이 나오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레버리지 상품까지 생각하면 상승장에서선 웬만한 코스피 우량주보다 수익률이 좋다.

여의도 사람들의 코스닥 ETF 투자는 연초 코스닥 상승 랠리로 준수한 성적표를 냈다. 1월 말 코스닥지수 증가는 913.57로 지난해 3분기 말 대비 40% 넘게 올랐다.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KRX 300 출범과 코스닥 전용펀드 소득공제, 스케일업 펀드 등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투자심리에 불을 당긴 결과다.

코스닥 150 상품을 추종하는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2만8천원 넘게 올라 같은 기간 140% 이상 수익률을 냈다. 코스닥 지수를 맨 앞에서 이끌었던 셀트리온의 수익률을 뛰어넘은 셈이니, 특정 종목 투자가 어려운 이들이 찾은 만했다.

한동안 천장을 모르던 코스닥지수에 제동이 걸린 건 2월부터다. 금리인상 공포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한파가 덮쳤

다. 4개월 새 40% 넘는 상승세를 보인 코스닥시장에 조정이 올 것 이란 전망은 있었지만 그 시기와 폭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12일 종가는 843.24. 열흘 남짓 동안 80포인트가량 지수가 빠졌다.

'추세 상승'에서 '변동성 확대'로 코스닥시장 열쇳말이 바뀌었다. 지난해 실물경기 회복세 대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며 저평가 상태로 주목받은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시장 특성 탓이다. 금리인상기에 취약한 성장주가 하락하며 변동성이 커졌다.

여기에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바이오주 쏠림 현상을 들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셀트리온 삼형제를 내세운 바이오주의 급등이 지수를 이끌었는데, 양대 증시 통합지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미리 유력 후보군을 선점하려는 매수세가 몰린 결과였다. 특정 종목의 쏠림이 크다 보니 이들의 하락세를 방어할 수단이 적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스닥시장을 떠나 코스피시장 시가 총액 3위로 화려하게 입성한 대장주 셀트리온의 지수 조정 영향도 변동성을 키웠다.

코스닥 증시 변동성의 시대는 미국 금리인상 기조를 확인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란 게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미국 금리인상에 실물경기 둔화가 겹쳐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투자 시 고려할 변수를 줄일 필요성이 나온다. 결국 3월에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나올 금리 방향성을 확인해야 증시 방향성을 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언제 상승세로 돌아설지 모르는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 확대 기조를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내 요건 가운데선 KRX 300 지수 수급효과와 셀트리온 이전 상황에 따른 증시 조정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마중물이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는 시기와 규모를 기다려볼 직하다. 백



지난해 4분기 이후 셀트리온 삼형제를 내세운 바이오주의 급등이 코스닥지수를 이끌었다. 사진은 인천의 셀트리온 본사



김훈남 머니투데이 증권부 기자
hoo13@mt.co.kr

혁신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정부는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할(scale-up)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 등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행 등의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의 이익실현과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R&D 단계, 제품상용화 단계를 넘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진출 등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돌입할 경우 기존 자금이 소진되는 시기지만 새로운 자금조달은 어려운 자금공백기가 발생하기 쉬워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창업 초기기업 등에 충분한 성장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을 주목했다. 과거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했던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자 했다.

다양한 세제·금융 지원으로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유인

지난 1월 11일 발표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소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 등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 지난 12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벤처·창업 축제인 '2017 벤처창업 페스티벌'의 모습(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특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마련했다. 이 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해 '벤처기업 신주 15%'라는 투자비중 관련 운용규제 등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도 제고하고자 했다. 2019년부터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0.3%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기금 운용평가지침 등을 개선해 연기금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KRX 300) 출시,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피 200 중심의 벤치마크 지수 쓸림현상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부실기업 퇴출기준은 강화하고

코스닥시장의 자율성·독립성은 제고하고


둘째, 코스닥시장에 대한 진입요건은 완화하고 퇴출기준은 강화하고자 했다. 먼저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진입요건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익미실현 기업이라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 이른바 테슬라요건의 풋백옵션(put back option; 주식, 실물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가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 부담도 완화했다. 최근 3년 내 테슬라요건으로 상장 이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6개월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풋백옵션을 면제할 계획이다.

진입요건 완화와 함께 퇴출기준 등은 강화했다.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상장실질심사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등으로 코스닥시장의 신뢰도가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주주 등의 책임 경영 유도과 상장주관사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셋째, 코스닥시장이 코스피시장과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개정 권한 등을 보유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코스닥시장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했다. 더불어 코스닥시장 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업무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코스닥시장의 진입과 퇴출요건 개선에 맞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고자 한 취지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다. 2000년대 초 발생한 IT버블 등 시장 신뢰성에 대한 시각과 나스닥시장과 같이 혁신기업의 자본시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이 두 가지 시선을 최대한 감안하되 '혁신성장'이라는 한 가지 방향성을 유념하며 마련됐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혁신기업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오형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원
loInlok@korea.kr

기업정보의 접근성·투명성 높여야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후 코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버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과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에도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유도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네이버, 다음 등 지금의 대형 인터넷기업이 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버블 붕괴라는 부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았다. 과거 경험을 교훈 삼아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이 코스닥지수 상승만을 지향하고 있는지, 코스닥시장의 '기업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시장 활성화 대책이 주가 상승만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 주가가 크게 높아지는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버블이 터질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시장 구조는 취약해진다. 이번 대책이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을 기반에 둔 대책이 돼야 할 것이다. 금

융은 실물경제의 거울이라고 한다. 실물성장 없이는 금융발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코스닥시장과 연계해보면 혁신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면 해당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돼 있다. 결국 코스닥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고 코스닥지수는 견조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기업 육성정책은 경기 부양과 잠재성장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혁신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국 중장기적인 우리의 산업구조와 연관된 정책을 기반으로 혁신기업 육성정책이 추진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들도 보다 긴 그림으로 코스닥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은 성장국면별로 그 성격이 상이하다. 특히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때는 주식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비용이 적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기업들 중 상장 이후 시장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기업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 저하로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주식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이번 대책과 함께 기업들의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혁신기업 육성은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기업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성장과 코스닥시장의 성장이 동일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코스닥시장 투자도 보다 긴 안목에서 기업 펀더멘털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게 될 것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yonguk.ku@miraeasset.com

아누 파르타넨,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과거로 후퇴한 미국 vs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북유럽 국가들

“이 나라에서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공장을 하나 지었다 칩시다.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공장의 제품을 시장으로 옮겨줄 도로는 우리 모두의 돈으로 지은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의 말 - p.335

핀란드의 저널리스트 아누 파르타넨은 미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 뉴욕에서 신혼을 시작한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지만 꿈은 곧 사라진다. 커피 주문이 핀란드에서 세금 신고하는 것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그는 휴대전화를 사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케이블TV를 설치할 때마다 불합리한 약관과 예외조항, 갖은 명목의 수수료에 머리를 싸쥐고 전전긍긍한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손해 본 건 아닐까? 과연 나같이 한심한 인간이 이 나라에서 잘살 수 있을까? 자괴감에 빠진 그는 주위의 미국인들이 자신보다 더 불안해하는 걸 알고 안도한다. 미국 여성의 90%가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며, 연소득 10만달러가 넘는 이들조차 거리에 나앉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조사 결과는 불안이 미국인이 되는 증거임을 일깨운다. 그즈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핀란드”라는 「뉴스위크」 기사 덕에 그는 자신감을 되찾는다. 하지만 긴 출산휴가와 탁아 서비스, 훌륭한 공교육이 핀란드의 성공 비결이라는 분석에 그는 고개를 갸웃한다. 음울한 핀란드인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만만한 미국인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보육이나 교육 때문만은 아니라 보았기



에, 그는 두 나라의 차이와 그 이유를 치밀하게 분석한 책을 쓴다. 미국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힌 화제작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가 그것이다. 그는 핀란드를 비롯한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것은 '자유, 개인적 독립, 기회'라는 현대성을 구현한 때문이며, 이 가치를 선도했던 미국인들은 과거로 후퇴해 의존적인 인간이 됐다고 지적한다. 노르딕 국가가 보편복지를 통해 모두가 독립된 개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반면, 미국은 복잡하고 선별적인 복지로 인해 실제로는 중산층 등 대다수 국민이 수혜자임에도 마치 게으른 가난뱅이만 혜택을 받는다는 편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불투명성과 편견은 “제도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면 나도 공정할 필요가 없다”는 불신과 분노로 공동체의식을 훼손하고, 나아가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사랑을 의무와 채무 관계로 변질시킨다.

파르타넨은 강한 공동체가 개인의 독립과 평등한 사랑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보다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 스포츠팀조차 만들지 않는 핀란드 학교, ‘너는 특별하지 않다’는 안테의 법칙을 신봉하는 노르딕 사회에서 경쟁과 성공은 당연시되지 않는다. 사람은 저마다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커피 주문보다 쉬운 세금 계산은 이런 사회를 만드는 재원인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이 모두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전 같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았을 남북단일팀이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일으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당연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다. 미국처럼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에서 공정성이 오히려 공동체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공정성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쟁과 연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



김이경 작가
no-bari@hanmail.net

책을 만들다가 지금은 책을 읽고 쓰는 일을 한다. 소설 쓰기가 제일 즐겁지만, 숨어 있는 좋은 책을 소개하는 즐거움이 쏠쏠해서 독서칼럼도 쓰고 독서회 강사도 하고 있다. 저서로 「순례자의 책」, 「책 먹는 법」, 「시의 문장들」 등이 있다.

3월부터 일반국민도 예산사업 제안 가능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



지난해 8월 30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의 모습
(사진제공: 천안시청
공식 블로그)

올해부터 국민들은 중앙정부에 예산사업을 제안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 26일 발표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이하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356억원) 등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원)을 반영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참여예산제를 올해 본격 시행하기 위해 연구용역, 민간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 시행 지자체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국가재정법」상 국민참여에 관한 근거조항(제16조)에 기초해 국민참여를 위한 기구(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앞으로 참여예산제는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째,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틀 내에서 운영한다. 둘째,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경험을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한다.

제안대상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참여예산제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첫째, 국민의 예산사업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나라살림이 편성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3월 중순 오픈 예정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다만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면서 「국가재정법」(제38조)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을 제안대상으로 한 이유는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미치는 사업일 경우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시행 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지만 2년 차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에 해당된다.

신규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예산(일반

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계속사업)은 국민제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계속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제안은 가능하다. A사업의 운영방식을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면 국민이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해 바우처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안이 한 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환경, 복지 분야 등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을 말한다.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에야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참여예산제 도입 첫해인 올해는 빠른 시일 안에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대상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접수된 국민제안사업을 기재부가 해당 부처로 송부하면 부처는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한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나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은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돼 제외된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한다. 협의회는 민간전문가, 기재부, 각 부처로 구성되는데 부처가 적격성 점검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전문가와 기재부는 필요할 경우 부처와 협의해 적격성 점검 내용을 수정한다.

적격성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각 부처는 국민제안을 숙성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국민제안이 개략적 아이디어만을 담고 있을 경우 사업기간, 사업규모(물량, 단가 등) 등을 구체화해 예산사업으로 숙성시킨다. 협의회는 사업숙성 내용을 검토해 확정하게 되며, 이후 각 부처는 숙성과정을 거친 국민제안사업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해 기재부에 제출한다.

성·연령·지역별 무작위 추출된 예산국민참여단,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의 타당성 논의

셋째,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해 국민들이 제안하고

참여예산제는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틀 내에서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경험을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숙성해 기재부에 요구한 후보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로 참여의사를 타진해 구성하는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방법을 사용한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 전문성을 함양하게 되며, 사업을 제안한 국민과 정부부처 사업숙성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넷째,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후보사업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일반국민의 사업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표본을 추출해 설문조사를 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선호도는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실시해 조사한다.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과 예산국민참여단의 선호도가 집계되면 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그 결과를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데 국민참여예산사업도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참여예산제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예산사업들을 손쉽게 제안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나라살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식과 관심, 나아가 신뢰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한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
hanjung1@korea.kr

사회 문제 해결형 ICT R&D 투자, 4.5% → 45%로 강화

2017년

2022년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지난 30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정책은 정부 만능주의의 관점에서 산업과 시장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연구개발(R&D) 기반 기술혁신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민간·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주도권을 상실(민간 vs 정부 ICT R&D 규모: 2011년 19조6천억원 vs 9천억원 → 2015년 27조원 vs 1조원)했음에도 여전히 정부 주도 추격형 산업육성 방식에 집중하면서 민간의 경쟁력이 높고 투자가 활발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복 투자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오고 있었다. 특히 국가 경제·사회의 지능형 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ICT 핵심기술과 도전적 기초원천기술이 아닌 단기 상용화·안정적 기술 확보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ICT 기술혁신체계는 정부의 간섭주의적 행태로 R&D시스템 전반이 경직되는 한편, 연구자의 도전·창의적 연구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칸막이식 사업, 연구데이터 공유 미흡, R&D 성공 강조 등은 혁신주체 간 개방·협업에 기반한 고위험·도전적 연구활성화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중소기업 ICT R&D 전용펀드 결성하고

R&D 졸업제 도입

이러한 정부 만능주의와 간섭주의에 기반한 ICT R&D 추진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ICT R&D체계 재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 지난 1월 30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은 정부 만능주의·간섭주의 R&D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R&D와 관련한 권한을 연구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고, 시장과 경쟁하는 R&D가 아닌 정부의 고유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 설정에 집중하고, 연구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예산을 직접 결정하고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민간의 ICT R&D 역할을 재정 의한다. 둘째, 산업 성장을 위한 기술 공급에 치중하는 R&D가 아닌 국민생활 문제(사회 문제) 해결형 R&D를 강화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ICT R&D의 역할을 확장하고, R&D 관련 고용 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가점 등 ICT R&D 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셋째, 단기 상용화 기술이 아닌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적·고위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가 10년 이상 한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ICT 혁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ICT R&D 투자방향을 3대 축으로 개편한다. 고위험·불확실 분야의 신규투자를 2017년 6.2%에서 2022년까지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기적 기술축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연구실을 10년 이상(기존 평균연수 3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해 도시·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등 6대 분야의 국민생활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투자를 2022년 신규과제 예산의 45%(2017년 4.5%)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R&D와 사회 문제 해결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시범서비스+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R&D 방식을 추진한다.

한편 중소기업 R&D는 정부출연금 의존기업(한계기업) 양산형에서 혁신적 연구의 상용화를 추구하는 R&D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출연 위주의 지원방식을 탈피해 ICT R&D 전용펀드, 구매조건부 R&D 등을 추진하고 반복적 R&D 수혜를 막기 위해 R&D 졸업제를 도입한다.

다년도 협약 도입, 연차평가 단계적 폐지 등 연구자 자율성 확대

두 번째 실행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R&D 혁신기반 조성이다. 기술 분야별로 세분화된 칸막이를 2018년 상반기에 통합(10대~6대 분야)한다. 더불어 사업구조 역시 고위험·도전적, 국민생활 문제(사회 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 등 3대 연구목적형으

로 2020년까지 재편성한다. ICT R&D 프로세스(기획-관리-평가-보상) 또한 문제기획 및 다년도 협약 도입, 연차평가 단계적 폐지, 실패용어 미사용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고용친화적 방식으로 ICT R&D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선정평가 시 고용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고용과 연계해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ICT R&D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연구자가 중심이 된 창의적·도전적 연구,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으나 기업들의 장기투자가 어려운 ICT 기반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ICT를 통한 주요한 사회 문제 해결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전략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이러한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whchoi13@korea.kr

지난해 11월 20일 강원도 춘천소방서에서 소방당국 및 SKT 관계자들이 'ICT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안전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는 SKT와 협력해 특수단말기, 통신드론, Live 중계·관제 서비스 등을 결합한 공공 안전 솔루션을 재난 구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개인신용평가체계는 카드 사태, 신용불량자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당시 정부 주도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성장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의 기초가 되면서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전 국민의 경제·금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돼온 개인신용평가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우리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 시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 완화

첫째,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먼저,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의 차등이 완화된다. 현재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은 업권 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든가 은행권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이용 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CB 평가체계가 개선된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 폭이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처럼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 간 차등이 폐지된다.

아울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665점인 B씨와 신용위험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행 등급제에서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이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시스템도 보완해 CB의 비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연체 등 부정적 정보 외에 상환실적 등 긍정적 정보의 균형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금융거래정보만으로 신용도를 판단할 경우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주부·고령

층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층 330만명을 포함한 약 1,100만명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실적이 없는 소위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 해당돼 개인신용 평가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CB에 긍정적인 정보를 등재하면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해 공공요금·통신비 납부실적 외에도 민간보험료 납부정보, 체크카드 사용실적 등도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점상승 폭도 확대한다. 나아가 CB가 평가에 활용하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구분해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으로 독자적인 신용점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도입

둘째,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연체정보의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단기연체정보는 30만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 시, 장기연체정보는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해야만 등록돼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반기 중에 등록 기준이 조정된다. 다만 금융회사 간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할 때와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했거나 그 이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단기연체정보 등록 기준(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이 적용된다.

또한 금융권 단기연체 및 상거래연체 채무를 상환하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이력정보 활용도 일부 제한된다. 금융권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상거래연체의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금융권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평가활용기간(3년)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평가지표 및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신용정보의 예측·관리 가능성을 제고해 개인의 합리적인 신용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CB는 2분기 내에 세부 평가 기준, 반영비율 및 본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권 연체정보의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단기연체정보는 30만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 시, 장기연체정보는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해야만 등록돼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반기 중에 등록 기준이 조정된다.

요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소비자 친화적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변화를 편리하게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제공한다.

더불어 개인신용평가체계의 상시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된다.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설치되며, CB가 평가모형의 검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해 자체검증을 내실화한다.

또한 주요 정보에 대한 고객 통지 강화, 이의제기권 도입 등 평가 전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한다. 단기·장기 연체사실 발생 시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폭넓게 보장하며,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신용점수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번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중금리대출 등 차주별 위험 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금융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혁신성과 포용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개인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빅데이터 활성화,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제도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

이한진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장
biophila@fsc.go.kr

〈세계는 지금〉은 OECD·WTO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루지는 정책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코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지분 공동소유 어떻게 봐야 할까?

기관투자자 공동소유의 경쟁적 함의



이승규 주OECD대표부 참사관
sklee16@mofa.go.kr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시장에서 개인, 기업 등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방식이 급격히 변화했다. 위험을 분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 직접투자 대신 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통한 간접투자 비중을 늘린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직접투자 비중은 1960년대 중반 84%에서 2011년 40%로 감소한 반면 뮤추얼펀드와 ETF(Exchange Traded Funds)의 규모는 2011년 이후 2배 넘게 증가해 2015년 말 기준 총 4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펀드의 증가가 특히 항공, 은행 등 집중도가 높은 분야에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의 투자기관이 특정 분야 전반에서 여러 경쟁회사들의 공동의 주주가 됨으로써 가격을 높이고 담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OECD도 지난해 말 개최된 제128차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동일시장 내 복수 경쟁사에 대한 지분 공동소유(cross-holding)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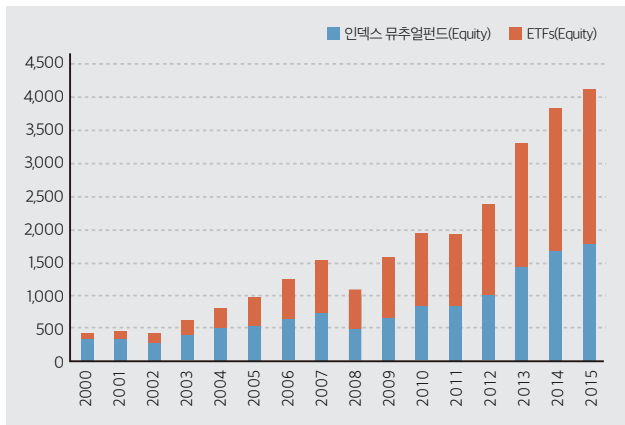
3대 펀드의 美 상장사 지분율 17.6% 넘어...

‘담합 형성자’ 역할도

펀드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펀드 내 집중도도 높아졌는데, 블랙락(BlackRock), 뱅가드(Vanguard),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등 3대 펀드의 2015년 1,662개 미국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17.6%를 넘고 있다(Fichtner et al, 2017, p.2). 또한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특정 산업 내 복수 경쟁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도 늘어났는데,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같은 산업 내 여러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상장사 비중이 1980년

〈그림〉 지분투자 펀드의 규모 변화

(단위: 10억달러)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Fact Book; BlackRock Global ETP Landscape Report Dec. 2015. Extracted from Fichtner et al. (2017)

대 10% 미만에서 2014년 약 60%로 증가했다(He and Huang, 2017).

기관투자자의 복수 경쟁사 지분 공동소유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미국 항공산업의 경우 연구방법에 따라 3~12%의 항공료 인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zar et al, 2017). 한 기관투자자가 여러 경쟁사들의 공동주주인 경우 한 회사의 가격인상 시 고객이탈로 인한 손실이 경쟁사의 고객 증가로 보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복수 경쟁사 지분 공동소유는 투자대상 회사들 간 담합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 공동의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들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담합 준수를 감독하는 담합 형성자(ringmaster)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담합에서 이탈해 추가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일부는 담합 와해로 인한 공동이익의 손실로 상쇄되기 때문에 담합 이탈을 방지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이다.

공동소유의 경쟁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이러한 소수 지분소유가 기업의 행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느냐는 것이다. 공동소유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보다 낮다면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대상 회사의 지분이 분산돼 있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석율이 낮을 경우 이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며, 복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소수의 전문 의견권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 투표연합을 통해 영향력을 높일 수도 있다.

의결권 행사 외에 기업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 경영진과의 비공식적 접촉이나 인센티브 구조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진들은 상당한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기관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돼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경영진의 보상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성과와 연관돼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개별 기업

의 성과보다 산업 전반의 성과와 연관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Anton et al, 2016).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기관투자자의 소수 지분 취득에는 적용 안돼

우선 기존 경쟁법상 대응방안으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가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 회사에 '통제력(control)'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소수 지분 취득은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투자대상 회사로 하여금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는 등 반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가령 EU는 인수대상 회사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decisive influence)'을 심사대상 기준으로 하며, 영국은 '실질적 영향력(material influence)'을 기준으로 통상 25% 이상의 지분인수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 '통제력' 대신 '실질적 경쟁제한성(substantially lessen competition)'에 초점을 맞춰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나 이 경우에도 10% 이상의 지분취득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그마저도 '단순투자목적(solely for investment)'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기관투자자의 소수 지분 취득에 기업결합



블랙락(BlackRock), 뱅가드(Vanguard),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등 3대 펀드의 2015년 1,662개 미국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17.6%를 넘고 있다. 사진은 미국 금융회사인 블랙락 뉴욕 지사의 모습

〈표 1〉 미국 항공산업의 최대주주(2016년 4분기)

델타항공 (Delta Airlines)	%	사우스웨스트항공 (Southwest Airlines Co.)	%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	8.6	프라임캡 (PRIMECAP)	11.8
블랙락(BlackRock)	6.8	버크셔 해서웨이	7.0
뱅가드(Vanguard)	6.3	뱅가드	6.2
스테이트 스트리트 (State Street)	4.3	블랙락	6.0
제이피모건(J.P. Morgan)	3.8	피델리티(Fidelity)	5.5

아메리칸항공 (American Airlines)	%	제트블루항공 (JetBlue Airways)	%
티. 로 프라이스 (T. Rowe Price)	14.0	뱅가드	8.0
프라임캡	9.0	피델리티	7.6
버크셔 해서웨이	7.8	블랙락	7.3
뱅가드	6.0	프라임캡	5.9
블랙락	5.8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3.0

유나이티드컨티넨탈홀딩스 (United Continental Holdings)	%	알래스카항공 (Alaska Air)	%
버크셔 해서웨이	9.2	티. 로 프라이스	10.14
블랙락	7.1	뱅가드	9.73
뱅가드	6.9	블랙락	5.6
프라임캡	6.3	프라임캡	5.0
PAR Capital Mgt.	5.2	PAR Capital Mgt.	3.7

자료: Azar et al, 2017

〈표 2〉 유럽 은행들의 최대주주(2016년 4분기)

HSBC	%	BPM	%
블랙락	5.9	블랙락	5.2
리갈 앤 제너럴 (Legal & General)	3.0	타임 앤 라이프(Time & Life)	4.0
뱅가드	2.3	디멘셔널 펀드 (Dimensional Fund)	3.4
스테이트 스트리트	2.2	노지스뱅크	3.0
노지스뱅크(Norges Bank)	2.0	스탠다드 라이프 (Standard Life)	2.0

빌바오은행 (Banco Bilbao)	%	산탄데르은행 (Banco Santander)	%
블랙락	4.9	스테이트 스트리트	12.7
제이피모건	3.6	뱅가드	9.9
릭소(Lyxor)	2.9	BNY 멜론(BNY Mellon)	6.1
뱅가드	2.0	블랙락	5.2
아문디(Amundi)	1.9	소시에테 제네랄 (Société Générale)	4.0

포포라레은행 (Banco Popolare)	%	도이치은행 (Deutsche Bank)	%
블랙락	5.1	블랙락	6.2
노지스뱅크	3.7	패러마운트(Paramount)	3.1
Fond C&RdL	2.9	슈프림 유니버설 (Supreme Universal)	3.1
디멘셔널 펀드	2.5	DB, PB&BI	2.6
뱅가드	2.0	메릴린치(Merrill Lynch)	2.5

자료: Schmalz, 2016

심사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경쟁법 이외에 추가적인 규제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가령 과점시장 내 복수회사 지분 동시소유 시 시장점유율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강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를 정당화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경쟁제한성이 없는 공동소유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투자대상 기업들의 성과 고취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기관투자자의 이해관계가 투자대상 회사들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이들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韓도 기관투자자 투자규모 증가세...

공동소유 현황이나 잠재적 경쟁제한성에 대한 연구 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 유럽 등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들과는 기업에 대한 지분소유가 분산돼 있고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의 투자비중도 높은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확실한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간접투자자의 비중이 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활동하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동소유 현황이나 그 잠재적 경쟁제한성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卍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 전경

제네바의 하루 일과부터 다자 통상의 속성까지

WTO 기초 사용 설명서



윤동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yoondj@korea.kr

최근 WTO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는데, 그럼에도 WTO로 대표되는 다자 무역체제는 우리가 지향할 가치이고 세계로 열린 창이다.

제네바의 하루 일과는 프레스 리뷰(press review)로 시작한다. WTO 사무국이 매일 세계 주요 신문과 잡지 가운데 통상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서 각 공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WTO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기사지만 가끔 일본어 기사 등도 있고 그럴 때면 영문 요약이 더해진다. 다만 WTD(Washington Trade Daily), Inside U.S. Trade 등은 모두의 필수 항목이므로 스크랩에서 다루지 않는다.

WTO 업무를 다루면서 영어로 된 기사와 문건, 논문, 책자가 대단히 많다는 점에 한 번 놀라고 국내에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세계 10대 무역강국이라는 우리 자부심과, 통상 담론에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하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WTO 회의가 정부 대표만이 참석하는 구조라서 그럴 수 있겠다 싶다. 또한 전문 보고 시스템이 보안상 이유로 내부에 한정되고 민간과 소통할 필요가 적었을 뿐 아니라 오

히려 과거에는 부담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 원인은 수요에 있다고 본다. WTO에 관심을 두거나 꼭 알아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다. 1994년 WTO 협정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담당자들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안에 쫓기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부만의 업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고 요즘처럼 보호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WTO에 대한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동안 WTO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은 적절하다. 더 중요한 일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다. 당연하지만 국제사회는 알지 못하면 싸우지 못 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전문성과 실력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성과 실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토양에서 자랄 수 있다.

제네바 협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표면만 따라가면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회의를 열심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대 뒤에서 벌어진 배경을 모르면 맥락을 잘못 이해하거나 다음 수를 읽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나름대로 믿을 만한 정보원을 확보해야 한다.

첫걸음은 WTO 시스템에 대한 이해다. 숲을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947년 GATT 출범과 이후 다자 라운드의 역사, 더 멀리는 신대륙 발견에서 제국주의 확산, 식민과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발전 과정을 살펴야 한다. 남과 차별화된 실력은 세부 지식(details)에서 나온다. 즉 뿌리와 가지, 나뭇잎을 알아야 열매를 수확하는 이치다. WTO는 협정문과 계약서를 쌓아 올려놓은 형태다. 사연과 곡절은 단어 하나, 수치, 심표, 각주로 반영돼 있게 마련이다. 꼭꼭 쓴 과거이고 복잡할수록 먼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필요한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아야 한다.

WTO는 문서로 구조화돼 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서류가 한 무더기씩 배달된다. 올해부터는 예산 사정상 서면 배포를 축소하는 대신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간다고 한다. 방향은 맞지만 중요한 문건을 검토단계에서 놓치지 않도록 더 유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편 비관세 분야(TBT/SPS) 등은 별도 통보 및 온라인 배포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운영 중이다. 2017년 한 해에 통보된 TBT/SPS 조

치는 4,345건이고 'tbtsims.wto.org' 및 'spsims.wto.org'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농업 분야는 타 상품 및 서비스와 달리 양허표의 내용이 상세하고 보조규율을 포함해 더 상세하고 복잡한 규범을 택했기 때문에 거의 매 분기마다 농업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통보 및 이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으며 지난 2월 말 제86차 회의가 열렸다. 인터넷 사이트 'agims.wto.org'에 1차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의 관련 자료와 데이터가 공개돼 있다. 즉 지난 20여년간 주요 국가의 농업 관련 정책, WTO 협정 이행, 통보 등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는 셈이다.

뜻과 이익이 맞는 우리의 편(like minded)을 만들고 공동 대응해서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다자의 매력이다.

다자 통상은 혼자서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오직 미국만 그럴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편을 많이 갖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 그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164개국으로 WTO 회원국 수가 늘면서 그룹을 통한 의견 수렴이 많아지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역사, 문화, 언어 측면에서 쉽게 같이 갈 친구가 적다는 데 다자의 근본적 애로가 있다. DDA(도하 개발어젠다) 농업 협상은 수입국 입장에서 G10, 개도국 이익을 위해 G33의 일원으로 대응해왔다. 최근 중견국가 모임인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지난 12월 1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1차 WTO 각료회의 개회식에서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 터키, 호주)가 UN을 넘어 WTO까지 활동을 넓히려는 것도 우군 확보가 어려운 중간적 국가의 특징을 반영한다.

같은 그룹에 속하면 잦은 회합과 정보공유, 공동작업이 수반된다. 이때도 제 몫을 못하면 그룹 내 주변으로 밀려나고 핵심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계속 기여해야 한다. 개인도 그렇지만 다자 외교는 나와 상대방뿐 아니라 상대방과 타 상대방의 관계도 살펴야 한다. 애증의 역사는 도처에 깔려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중동과 아프리카 내부 주도권, 러시아와 유럽 등 사례는 많다. 다자에서 역사와 외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최신 쟁점을 다룰 때 행간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곤 한다.

한편 OECD 등 다른 국제기구 및 EU, 미국 등 주요 공관과 수평적 협업이 지속돼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이슈에 대한 공유와 협력이 체계적이다. 사실 WTO, OECD, 미국, EU 등을 4대 축으로 삼아 들어가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흐름과 전망, 논점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문가 확충과 정부와 연구기관 간 협업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수직적 소통에 치우쳐 수평 소통과 시스템을 소홀히 한 탓이기도 하고 협력보다는 경쟁에 집중한 탓이기도 하다. 외신에 다 공개된 사항들도 대외비로 해서 일부 수신처에만 회람하는 사례도 많다.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형 정보공유 시스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분쟁해결은 효과가 확실치 않은 고비용 절차지만 지금까지 나온 다자 통상 시스템 중 가장 진화된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WTO가 자랑해온 UR(우루과이라운드)의 대표 성과물은 분쟁해결 시스템이다. GATT 시절 패널 권고, 결정 등을 채택하려면 전체 회원국이 합의해야 했다. 그래서 미국 등은 GATT 밖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고 자국 법에 의한 일방적(unilateral) 무역규제, 양자 협상 등이 증가했다. 1980년대 미국 수출자유규제(VFR), 통상법 301조 등이 대표적 사례다.

WTO는 이를 역합의제로 바꿨다. 모두가 반대해야 채택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WTO 분쟁은 주권 국가의 다툼이기에 이행 강제 측면에서 한계 역시 분명하다. 또 분쟁해결의 최종 목적이 규범에 합치 되게끔 해당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WTO 위반이라도 제소, 협의, 패널, 상소심 등이 나오는 수년의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결정을 수용해 이를 시정하면 사안은 종료된다. 즉 국내 소송처럼 비용을 패소한 측이 부담하거나 과거의 잘못에 따른 배상, 위자료 등 금전 청구를 하는 사법제도와 구별된다.

분쟁은 불가피하다. 속성을 알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와 관련된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상품 분야에서 추가 관세인하의 전망과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어 기존 이행과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이다. 올 1월에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규제제도 전반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이고 일부가 동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 진행되는 농업 분야 주요 분쟁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쌀·밀·옥수수 농업보조(미국 제소), 중국 TRQ(저율관세할당) 이행(미국), 캐나다와 인 판매차별(호주, 미국, 뉴질랜드), 중국 닭고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미국), 러시아 돼지고기 수입금지(EU) 등이다.

끝으로 WTO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 공개된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WTO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홈페이지 접속 수는 약 5천만번이라 한다. 그중 미국에서의 접속이 16%로 제일 많고, 멕시코 6%, 인도 5.7%, 중국 4.5% 순이다. WTO가 제공하는 이러닝(e-learning) 코스와 교재 역시 훌륭하다.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민간 연구기관 ICTSD(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사이트 등을 추천한다. 관심만 있으면 인터넷에 깔린 정보와 전문가들의 담론은 무궁무진하다. ■

달러가치 하락, 세계경제 성장에 도움 될까?

지난해부터 미 달러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달러가치 하락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이는 세계 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경제상황이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도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35%에서 2000년 30%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25%로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전망에서 2022년까지 미국경제 비중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이란 그 나라의 총체적 경제력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계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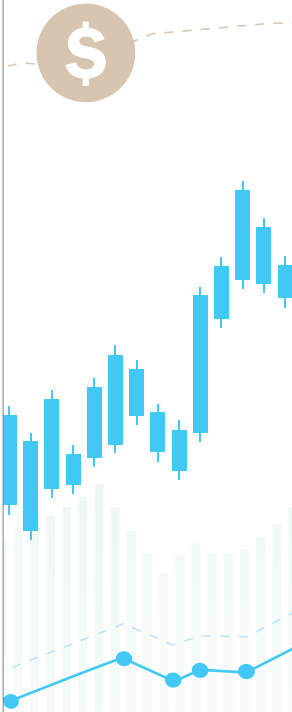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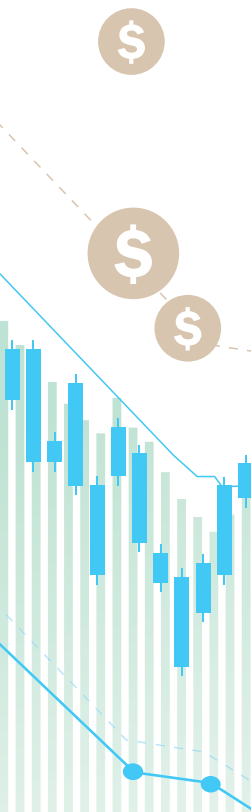
다음으로 순환 측면에서 달러가치의 변동이다. 1973년 이후 달러가치는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평균 5년 8개월에 걸쳐 47% 상승했고, 9년 동안 32% 하락하는 순환패턴을 보였다. 최근 동향을 보면 2011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 상승한 후 2017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올해 1월까지 10% 떨어졌다.

美,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거나 달러 약세 유도할 가능성 높아

미국의 경기확장 국면이 마무리되면 달러가치 하락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2018년 2월 현재까지 104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기순환 역사상 이보다 길었던 경우는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1961년 2월에서 1969년 12월까지 106개월이었고, 다른 한 번은 정보통신혁명이 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줬던 1991년 3월에서 2001년 3월까지 120개월이었다.

이번 경기확장 국면은 106개월을 넘어설 것이지만, 그렇다고 120개월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경기확장의 동인은 수요 측면에서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 공급 측면에서는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유가 등 에너지가격 하락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명목 GDP의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썼던 양적완화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통화정책도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실제 GDP가 잠재수준을 넘어서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주가 하락은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경제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한계로 미 정책 당국은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거나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비중 축소와 더불어 순환상 달러 약세 국면에서 경기수축 국면 진입은 달러가치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앞으로 4년 정도는



달러 약세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달러 가치가 완만하게 하락하면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1990년 이후 미국 가계는 자기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세계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가계가 부실해졌다. 1990년 GDP의 82%였던 가계부채가 2007년에는 135%까지 상승했다. 그 후 줄어들고는 있지만 2017년 3분기에도 107%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도 크게 늘었다. 2006년엔 한때 경상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소비자 역할 해야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미국 가계가 소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중국 생산자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생산해 미국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1990~2017년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4조7,300억달러(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3조1,300억달러) 적자를 냈다. 중국은 대미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로 미국채를 사왔다. 이는 미국의 금리안정과 자산가격 상승을 초래해 소비를 더 부추겼다.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소비자 역할을 해야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가치가 올라가야 한다. 중국경제도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소비 비중이 늘어나야 할 내부적 요인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0.4% 성장했는데도 중국경제는 10%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고정투자가 한때 GDP의 45%에 이를 정도로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부채가 GDP의 166%(2016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고, 기업 부실은 은행 부실로 이어졌다. 기업과 은행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가 늘지 않으면 중국경제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위안화가치 상승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달러가치의 완만한 하락은 세계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난해 이후 우리 원화가치도 계속 오르고 있다. 원화 환율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원화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북한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원화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달러 약세로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3~4년 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900원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정착할 전망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제조업의 위축은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도 있다. 기업은 고급 소비재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중국경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정책 당국은 원화가치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통화정책을 신중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solchan08@naver.com

감탄고탄 맞춤법

“달면 삼키고 써도 삼킨다!”
삼켜 두면 어쨌든 악이 될 맞춤법!

		이	것	만		알	아	도					
		참		든	든	하	다	던	데				

“죄송합니다. 바빠서 통화가 힘드니 이만 끊겠습니다.”라고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말했지만, 상대방은 물려서지 않았다. “아유, 잠깐만요”로 말꼬리를 붙들더니 “세상에, 정말 어떡하시려고요” “사람 일 모르잖아요, 괜찮겠지 싶어서 가입 안 하셨든 분들 나중에 엄청 고생하시는데” “이거 하나면 암이던 뇌졸중이던 다~ 커버된다니까요”를 속사포처럼 이어간다. 보험 판매를 위해 노력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건 좀 무례하지 않나. 하물며 그런 상대방이 ‘든’과 ‘던’을 마구 섞어 쓰기까지 하면 이렇게 되돌려 주고 싶다. “정말 어떡하시려고요.”


맞춤법을 비교적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들도 무심결에 지나치는 ‘든’과 ‘던’의 구분. 간단히 설명하자면, ‘든/든지/든가’에는 ‘선택’의 의미가 들어 있다. 쉽게 말해 ‘이거든 저거든’이라는 말이다. “내일은 개일걸?”이라고 잘못 말한(지난 호를 참조하자) 당신이 내일 마실 게 맥주든 소주든 막걸리든 고량주든, 곁들여 먹을 게 치킨이든 삼겹살이든 파전이든 휘귀든, 먹고 나서 춤추든 노래하든 집에 가서 잠을 자든 밥을 또 먹든 아무렴이다. 그게 뭐든 상관없으니 얼마나 든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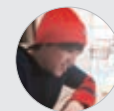
반면 ‘던/던지/던가’에는 ‘회상’의 의미가 들어 있다. 우연히도 발음이 비슷한 영어 단어 ‘done’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처럼 말이다.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니?”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스토킹을 할 정도로요” “예게,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던?” 등의 문장에 쓸 수 있겠다. “많이 사랑했든 조금 사랑했든” “마음이 아팠든지 몸이 아팠든지” “그렇게 가르치든 이렇게 가르치든”과 비교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과거에 네가 무슨 짓을 했□ 상관없어”에

알맞은 글자는 뭘까? ‘과거’라고 뱅크 ‘던’ 하시면 제가 참 속상하다. 저 문장은 A를 했든 B를 했든 C를 했든 뭐든 상관없다는 뜻이니 ‘든’이 맞는다. 꼭 선택지가 나열되지 않더라도 선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든’을 써야 하는 것.

그러니 보험 마케터 분이 먹고사느라 고생을 하시든 마시든 “엄청 고생하시는데”는 “엄~청 고생하시던데”가 되어야 하고(그리고 “가입 안 하셨든”이 되어야 하고), “고인이 돌아가신 이유가 혹시 암이던? (아니면) 뇌졸중이던?”이라고 물을 게 아닌 이상 “암이든 뇌졸중이든”이 되어야 맞겠다. 전화통 붙들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너무 이상한 사람 같고, ‘든’과 ‘던’을 잘못 쓴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테니 “정말 어떡하시려고요”라고 말하는 건 너무 오버 같아서 “그만 끊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먹고사느라 애쓰는 건 바쁜 근무시간에 이런 전화를 받는 나도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어떤 경우든 든든하게 대비하는 건 좋은 일이다. 전국의 보험인들을 비롯해 비상사와 관련된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기억하기 좋은 맞춤법이 아닐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가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었든, 과거에 저질렀던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어떠한 악자든 마음 든든히 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던가. 



박태하 출판편집자·작가
checkmats@daum.net
「책 쓰자면 맞춤법」을 썼다.

아이디어는 있다. 그런데 다음은?

창업은 처음이라 아이디어만 손에 쥐고 있다면, 창업의 길에 들어서긴 했는데 사업화가 아직 막막하다면 정부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 다음 단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달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만난 혁신기업가는 스마트 쓰레기통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이큐브랩 권순범 대표다. 그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화로 연결시켜 해외시장까지 공략했는지 들어보자.





임정욱이 만난 혁신기업가

그까짓 쓰레기통? 남다른 폐기물 종합관리솔루션입니다

권순범 이큐브랩 대표

지난 1월 말 미국 볼티모어시가 160억원 짜리 대형 프로젝트 발주를 발표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스마트 쓰레기통 4,500개를 설치해 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쓰레기 수거비용을 크게 줄이겠다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회사는 한국의 이큐브랩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경쟁입찰에 들어갔던 보스턴의 경쟁회사 빅벨리(Bigbelly)는 즉각 반발했지만 볼티모어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의 스타트업을 선택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우선시하고 보호무역주의로 선화한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런 큰 계약을 따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이큐브랩 본사를 찾아 권순범 대표를 만났다.

태양광으로 작동, 무선으로 정보 전달... 출시 5년 만에 50여개국에 보급

이제 서른이 된 권 대표는 창업 8년 만에 이큐브랩을 직원 40명에 올 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회사로 키워냈다. 그가 처음 스마트 쓰레기통 아이디어를 낸 것은 2010년 대학 3학년 때였다. "신촌에 쓰레기가 넘치는 것을 보고 해결책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근



무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쓰레기가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걸 압축하면 더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것이 학생프로젝트로 연결됐고 그 다음 해에 법인을 설립했죠." 학생이 당장 사업을 끌어갈 종자돈이 있을 리 없다. 공여지책으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에서 상금헌터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모전에서 돈 이외에도 얻은 것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을 계속 받으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됐다. 더 완전한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 고객인 환경미화원 등을 인터뷰하는 등 시장 조사를 열심히 했다. 공모전을 통해 초기 사업비용 5천만원 정도를 충당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어설픈 프로젝트가 사업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콜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등 벤처투자사로부터 20억원가량을 투자받았다. 이렇게 해서 처음 제품을 내놓은 것이

2013년 초다. 만 5년이 지난 지금은 50여 개 국가에 3천여개의 이큐브랩 스마트 쓰레기통 클린큐브와 클린캡 등을 보급시켰다. 매출의 95%가 해외에서 나온다. 창업 전까지는 해외경험이 전혀 없던 권 대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라 경쟁 제품이 없으니 조달청 경쟁입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국내에서 안 되니 어차피 죽을 것이면 나가서 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무작정 홍보메일도 보내고 관련 해외전시회에도 많이 나갔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참여한 전시회가 효과가 컸다. 아시아 젊은이들의 회사를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줬다.

반면 쓰레기통을 만든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좋은 팀 같은데 왜 그런 사업을 하나며 다른 아이템을 하면 투자해주겠다고 한 투자자도 있었다. “그까짓 것 누가 못 만드냐”라거나 “중국 회사들이 쉽게 모방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말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거리에 노출돼 있는 쓰레기통이 센서를 달고 태양광으로 몇 백킬로그램 용량의 쓰레기를 압축하면서 그 상황을 통신으로까지 전달하며 쉽게 고장도 안 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큐브랩의 클린큐브는 100% 태양광에너지로 작동해 쓰레기를 강력한 힘으로 압축해준다. 기존 가로변 쓰레기통보다 최대 8배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고,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 무선으로 시청에 전달해준다. 여기에 확실한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최적의 수거차량 운행코스까지 알려줘야 했다. 그래서 이큐브랩은 수거차량에

도 GPS를 달아서 배치방법까지 알려주는 종합관리솔루션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이큐브랩의 핵심 경쟁력이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폐기물관리 서비스까지 파는 것이다. 직원 40명 중 25명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쌓인 데이터에 의거해 최적화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이 적용된다. “스마트 쓰레기통만 설치했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중국 도시들도 저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하이에서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입찰에서도 가격경쟁력과 함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종합관제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볼티모어시의 프로젝트는 쓰레기 수거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라며 권 대표는 웃음과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레퍼런스 확보 위한

국내 지자체 실증 지원 절실

이큐브랩의 솔루션을 가장 잘 활용하는 고객은 미국과 호주의 도시들이다. 인건비가 비싸고, 쓰레기 수거를 민간 회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곳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특히 아일랜드의 더블린 공항은 이큐브랩의 시스템을 도입해 400개의 스마트 쓰레기통을 설치한 이후 수거·관리 비용을 90% 절감했다.

이에 반해 권 대표는 한국, 일본 등에서는 판매를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국, 일본은 관 주도로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새로운 시도에 소극적인 것 같다는 얘기가. “한국의 지자체들은 AWS(아마존웹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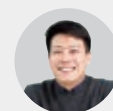
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우리 시스템은 다 AWS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쓰레기통만 팔고 나중에 관리해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클라우드시스템을 쓰면 이큐브랩이 각국의 데이터센터에 서버장비 등을 설치하고 수거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도 더 쉽다.

이큐브랩은 그래도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서울시를 시작으로 고양, 전주, 부산, 제주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돼 있어 국내에서 종합관제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 대표는 스마트시티도 최근에 중국, 인도, 캐나다 등이 치고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 이렇게 주문했다.

“IoT(사물인터넷)나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레퍼런스가 없으면 못 나갑니다. 한국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한국 지자체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수용해주지 않으면 레퍼런스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우리 같은 기업들을 위해 R&D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 주는 실증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잘 수용해줍니다.”

권 대표는 이큐브랩의 솔루션을 전 세계 모든 쓰레기 수거회사가 쓰는 표준 같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지 이큐브랩의 쓰레기통을 쉽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estima7@gmail.com



사업화 지원

사업화가 어려워... 내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결!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 구로구 G밸리컨벤션에서 열린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 사업 포럼의 모습(사진제공: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업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창업 준비 단계, 그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창업 초기 단계를 거쳐 도약과 회수 단계의 성장로드맵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사업화 단계의 창업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선도벤처연계 창업 지원 사업

사업화, 무엇보다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옆

에서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선배 창업인의 도움이 필요한 (예비)창업자는 선도벤처연계 창업 지원 사업을 주목해볼 만하다.

선도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후배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창업 성공 선도벤처기업을 매칭해준다.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성공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85개 내외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창업 전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교육·컨설팅, 사업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선도벤처의 직접투자과 구매·아웃소싱, 투자유치, 해외마케팅 등 협력비즈니스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올해 사업신청 접수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 042-480-4346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은 멘토링, 사업모델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의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기업으로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모델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정부사업 연계, 성과 창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사업모델 혁신, 제품 검증·보강, 시장진입, 후속지원(수출·유통·자금조달 등)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전문가 멘토링, 특화교육, R&D 연계, 5대 도약 아카데미와 같은 후속지원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사업비 500억원, 총 1천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 사업공고가 예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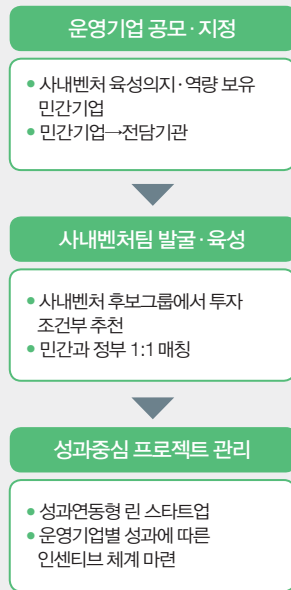
문의: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042-480-4341)

사내벤처 창업·분사 지원 사업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창업·분사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기업 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해 아이디어 사업화 및 분사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정부와 기업이 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해 10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내벤처를 보유한 기업이 먼저 이 사업의 운영기업으로 선정되면, 운영기업은 내

〈표〉 사내벤처 창업·분사 지원 사업 추진절차



부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내벤처팀을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추천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1년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기업에서 1억원 이상을 선투자하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사내벤처팀을 발굴·투자·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사내벤처팀에 대해 30% 미만의 지분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에 대해선 R&D, 보증·정책자금 및 후속투자유치 등 패키지방식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02-368-8741-5)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창업 후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해 혁신적인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 및 업종에 따라 1년 과정, 2년 과정, 추가 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1년 과정은 단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 수행자(기업)가 그 대상이며 1억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2년 과정에선 6T(IT·BT·ET·NT·ST·CT) 및 융복합 분야(제조업+ICT, 제조업+서비스) 등 개발 및 사업화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고급기술 과제 수행자(기업)에게 2억원을 지원한다. 추가 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 중 추가 사업화 과제 수행자가 대상이다.

입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금은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 등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준비 공간과 3D 프린터, RP(Rapid Prototyping) 머신, 가공기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며, 사업화 진도관리 및 단계별 집중교육, 기술, 판로개척(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진출(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도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은 정책자금,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 후속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경력자의 경우 만 49세 이하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니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자. ☎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팀(☎ 055-751-9833~4, 9837~8)

홍성어나라경제 기자



제언

스타트업의 기회는 시장과 밀접한 창업생태계에서 나온다



지난해 7월 21~23일 35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열린 '린 스타트업 캠프 2017'의 모습(사진제공: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선수들은 저마다의 실패를 극복하며 갈고 닦은 기량으로 경쟁을 하고 성적표를 받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자신과의 경쟁'으로 이야기하고 선수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으며 훈련한 시간이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스타트업들도 같은 과정을 겪는다. 아이디어나 초기기술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시장의 지속적인 접근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누적해가며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의 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졌고 이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혁신 프로세스인 린 스타트업은 시장에서 'build-measure-learn(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기)'의 단계를 빠르게 지속적으로 수행하

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장악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단순한 개념의 반복은 인내의 과정이며 고집스러운 실행이 필요하다. 이때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면 과정은 고통일 뿐이다. '왜(why)'를 통한 비전의 가치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도전과 실행의 누적은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의 스콧 셰인 교수가 설명한 '창업기회 발굴'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창업기회의 발굴에 있어 시장과 접근방법, 그리고 고객의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유한 정보만큼 '기회'가 보이며, 시장에서의 활동과 역할은 관련 정보, 즉 사전지식을 누적하게 해 기회 창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통로 안에 들어가 경험하면 밖에서는 몰랐던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는 '통로원리(Corridor Principle)'와도 의미가 같다. 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실패의 수정을 통해 시장과 고객을 알아가면서 스타트업들에 또 다른 기회 창출의 기회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기회 창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그간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 덕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창업 분야의 민간역량이 성숙됐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면서 더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사업의 초기목적과 방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수많은 무료 창업 교육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업과 맞물려 있는 교육과정들에 대해 참여자들의 피로도가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단발성으로 제작돼 무료 배포되는 창업서적들에 연구자들의 지속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이 느껴지는 듯하다.

창업생태계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이제 인간의 자생력을 이끌어내고 시장의 원리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사업 운영방식을 민간 주도로 개편하겠다는 개정안이 반갑게 들린다. 이 변화가 투자 부문뿐 아니라 교육, 시설, 멘토링, 사업화 등 다양한 창업 부문으로 이어져 민간으로 주도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려놓는 정부의 형님 같은 아량이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 그리고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비단 스타트업뿐 아니라 정부에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창업생태계가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게 돕는 것이야말로 다음 단계의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다. ■



이우진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원장
drlee@kookmin.ac.kr



레벨 상승

스테인리스 팬 사용법은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면서 새롭게 익힌 기술 혹은 기능 가운데 하나다. 평생(?) 별 생각 없이 코팅 팬을 써왔지만, 쌍둥이 먹일 음식을 하다 보니 팬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신경이 쓰였다. 아내가 큰맘 먹고 일반 코팅 팬보다 훨씬 비싸고 무거운 스테인리스 팬을 사줬다. 스테인리스 팬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책(정말 그런 책이 있다)도 함께 사줬다.

팬 바닥에 지저분하게 재료가 늘어붙을 때마다 짜증이 솟구쳤지만, 매번 다시 책을 펼쳐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재도전에 나섰다. 몇 주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흡소핑 채널에 나오는 코팅 팬처럼 깨뜨린 달걀이 흐트러지지 않고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팬 위에서 미끄러질 때 그야말로 희열을 느꼈다. 실제로 아이들 건강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할 줄 아는 남자가 됐다.

1년의 육아휴직은 스테인리스 팬 사용법을 익힌 이야기처럼 간단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남자 업그레이드'를 가져왔다. 예전에도 부엌일은 도맡는 편이었으니 한국 남자치고는 제법 살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 동안 육아와 살림의 최종 책임자로 지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집안일을 돕는 것과 집안일을 책임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육아와 살림의 최종 책임자는 당장의 끼니만 준비하지 않는다. 냉장고 속 재고와 유통기한을 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끼 뒤 메뉴까지 설계한다. 그래야 버려지는 식재료가 없다. 설거지를 위한 세제는 충분한지 수세미는 너무 낡거나 더럽지 않은지, 식기건조대에 물때가 끼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빨래통과 세탁장의 내용물을 늘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세탁기를 돌려야 아이들 입힐 옷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 쌍둥이들 손톱 발톱을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쌍둥이들 얼굴이나 어린이집 친구들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지적을 받는다. 아이가 아플 조짐을 보이면 담당 의사의 진료 일정을 감안해 얼마나 더 두고 볼지, 언제 병원에 갈지 판단한다.

하나하나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하게 이런 일들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 당면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다음을 위해 늘 인프라를 점검하고 중장기 과제를 염두에 두는 일상이랄까. 한때 아내가 불만을 제기할 때 "이만하면 잘하는 것 아니냐"고 마음속으로나마 대들었던 게 미안하다.

자영업자라면 모르겠으나 현대의 직장인들은 대개 최종 책임자 구실을 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고도로 분업화된 회사가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니 회사에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흔히 사소하게 여겨지는 육아나 살림을 유능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1년에 걸친 수행 끝에 최종 책임자의 자세가 제법 몸에 배었나 보다. 나보다 먼저 퇴근하는 아내를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를 입고 쌍둥이들과 함께 잠들곤 한다. 나한테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닌데 집에 들어가면 이미 일을 마친 세탁기가 자동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아침에 일어나 깜빡한 빨래가 떠올라 다용도실로 뛰어갔다가 건조기에서 잘 마른 빨래를 확인한 아내는 남편이 꽤나 기특한가 보다.

설 명절이 지나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투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 집은 참 평온한 명절을 보냈다. 그렇다고 이제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닐 게다. 지금도 조금만 방심하면 스테인리스 팬 위의 계란노른자가 터진다. **박**



악어에서 악어새로... 변화하는 홍콩과 중국의 역학관계



홍콩을 관광지가 아닌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국제적 금융센터이자 물류의 중심지다. 아편전쟁을 계기로 영국

이 홍콩을 점령하면서 홍콩경제의 시작은 영국과 함께했지만, 최근 50년간의 발전은 중국과 그 궤를 같이한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조치로 홍콩 제조업체들은 인근 광동성을 중심으로 공장을 대거 이전했다. 완구와 의류, 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홍콩경제는 20세기 후반 이후 서비스 주도형 경제체제로 탈바꿈한다.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계무역 기지로서의 역할이 '홍콩경제 1.0 시대'였다면, 서비스업 주도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홍콩경제 2.0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홍콩의 무역·물류·금융 중심지 위상 흔들려

홍콩은 주변 지역의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존립근거를 확보하고 안정적 발전기반을 토대로 지속 성장의 근거를 마련해왔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무역, 물류, 금융, 교육, 미디어, 관광에 특화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에 이른다.

최근 10여년 사이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180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물밀듯이 들어간 홍콩 제조업체들은 초창기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큰 힘이 됐다. 중국 정부가 광동성과 푸젠성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설립한 것도 홍콩과 대만 자본을 겨냥한 것이었다. 중국은 본토에서 홍콩과 대만 자본으로 생산된 제품을 홍콩항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홍콩 투자 기업이 중국 본토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면서 중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중국은 또한 홍콩 전시회 기간 전후로 유사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외국 바이어를 끌어모았는데, 자체적으로 단독 전시회를 하면 글로벌 바이어가 찾지 않으니 교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중국과 홍콩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하면서 발전해왔고, 이러한 시간은 1978

(위에서부터)
홍콩 센트럴 전경,
지난해 8월 17일 열린
홍콩 식품박람회의 모습,
홍콩항



년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됐다. 주로 중국이 거대한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홍콩에 의지에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홍콩이 ‘갑’이고 중국은 ‘을’인 관계다.

그러나 1999년 7월 홍콩 반환과 함께 이러한 갑을관계는 급속도로 역전한다. 글로벌 투자유치의 블랙홀로 부상한 중국에 수많은 기업이 진출하면서 세계경제사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홍콩은 시나브로 ‘을’의 위치로 전락했고, 중국은 ‘갑’으로 신분 상승했다. 국제 금융의 중심이라는 홍콩의 지위는 상하이와 급부상하며 흔들리고 있다. 영국계 컨설팅그룹 지앤(Z/Yen)이 최근 발표한 국제 금융경쟁력 순위에서 그동안 뉴욕, 런던에 이어 3위였던 홍콩은 싱가포르에 그 자리를 뺏겼다. 우리나라 역시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홍콩에 자리했지만, 지금은 몇몇 은행 지점들만 남겨둔 채 대부분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옮겼다.

물류기지로서의 이름값 역시 빛이 바래고 있다. 2004년까지 세계 1위의 물동량을 기록하던 홍콩의 지위는 201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는 상하이, 싱가포르, 선전, 닝보에 이어 세계 5위로 떨어졌다. 화물처리량은 2015년 2,007만TEU에서 2016년 1,981만TEU로 감소하면서 현재 6위인 부산항과의 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 싱가포르와 1, 2위를 다투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대외교역액도 2014년 1만118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며 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퇴색되는 중이다. 홍콩 경제성장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7년은 약간의 반등이 예상되지만, 중국의 홍콩 활용도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가 홍콩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한때 중국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해 왔던 홍콩이 이제는 중국 경기의 부침에 따라 경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형국이다.

핀테크 허브로 새로운 도약 모색 중

홍콩경제가 수년 연속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홍콩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캐리 램 행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재산업화’다. IT와 각종 산업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핀테크’다. 지난해 홍콩 정부는 금융과 IT를 접목해 핀테크 허브를 만들고, 세계적인 IT전자 중심지인 중국 선전시와 협력해 거대한 IT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최근에는 홍콩 전역을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안정적이면서도 과감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부터 단행했다. 눈에 띄는 것은 2015년 11월 신설된 창신과기부(Innovation and Technology Bureau)다. 니콜라스 양 창신과기부 장관은 기존 서비스 중심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해법은 홍콩경제의 다원화·고도화라고 강조했다.

‘적(?)과의 동침’에도 나서고 있다. 가장 큰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상호 핀테크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해 연말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술 등 핀테크 협력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홍콩경제 3.0 시대’를 여는 열쇠는 핀테크 분야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우리 기업이 홍콩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금융, 물류, 중계무역 중심지가 아닌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고도화된 혁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봐야 한다. 급변하는 변화의 바람을 읽고 발 빠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홍창표 KOTRA 홍콩무역관장
cphong@kotra.or.kr

통계, 세상과 소통하다

통계가 딱딱한 숫자가 아닌 부드러운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과학에서 벗어나 사회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통계를 만나보자.

성범죄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기 어려운 이유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영화계, 대학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나서서 발언하지 않으면 드러나기 어려운 범죄다. 피해자가 힘들어 발언해도 가해자들은 “그런 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심지어 “꽃뱀의 수작이다”라고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기 일쑤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느냐?” 또는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느냐?”라고 피해자에게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범죄 신고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솔한 범죄들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만다. 어떤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소상하게 알려줄 통계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성폭력 통계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에서 발표

성폭력 통계들의 출처는 대검찰청·경찰청·여성가족부 등의 기관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와 같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다. 검·경찰에서는 강도, 살인, 성범죄 등을 묶어 강력범죄(또는 흉악강력범죄)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서는 표본으로 뽑힌 사람들을 면접조사한 결과이며 학계의 연구 역시 대개 표본조사로 데이터를 얻는다.

검·경찰의 통계는 실제 사건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낮다 보니 전체적인 범죄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여성가족부 등에서 발표하는 표본조사에서는 전국적인 피해 실태와 더불어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조사할 수 있지만 민감한 질문이 포함되는 조사에서는 솔직한 응답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2017년 여성가족부의 보고서를 보면 7,200명을 조사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강간·강간미수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 결과를 보고 한국이 강간범죄 청정국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정확한 성폭력 통계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낮은 신고율만은 아니다.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의 정의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나라마다 법률에 명시된 강간의 정의가 다르고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달라서 국가별 통계를 바로 비교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상담 결과만을 갖고만 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폭력 실태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확한 성폭력 통계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낮은 신고율만은 아니다.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의 정의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점이다. 강간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대를 흥기나 폭력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거나 위협한 경우만 강간으로 볼 것인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인가, 또는 피해자의 상황과 주장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등에 따라 강간은 좁게 또는 넓게 정의되고 통계수치도 크게 달라진다. 게다가 데이트 강간이나 대학의 캠퍼스 강간처럼 아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나라마다 법률에 명시된 강간의 정의가 다르고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달라서 국가별 통계를 바로 비교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정확한 성폭력 통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그런 통계의 활용도가 낮을까? 그렇지 않다. 여성운동이나 성폭력반대 운동단체 등에서는 종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수가 많다는 통계를 강조한다. 언론에서도 '성폭력,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겪는다'(『한겨레』, 2017. 2.)와 같은 기사제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폭력을 가급적 덜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데 이들 역시 꽤 적극적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그들 중에는 강간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기 때문에 통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여성이 알아서 처신하면 성폭력은 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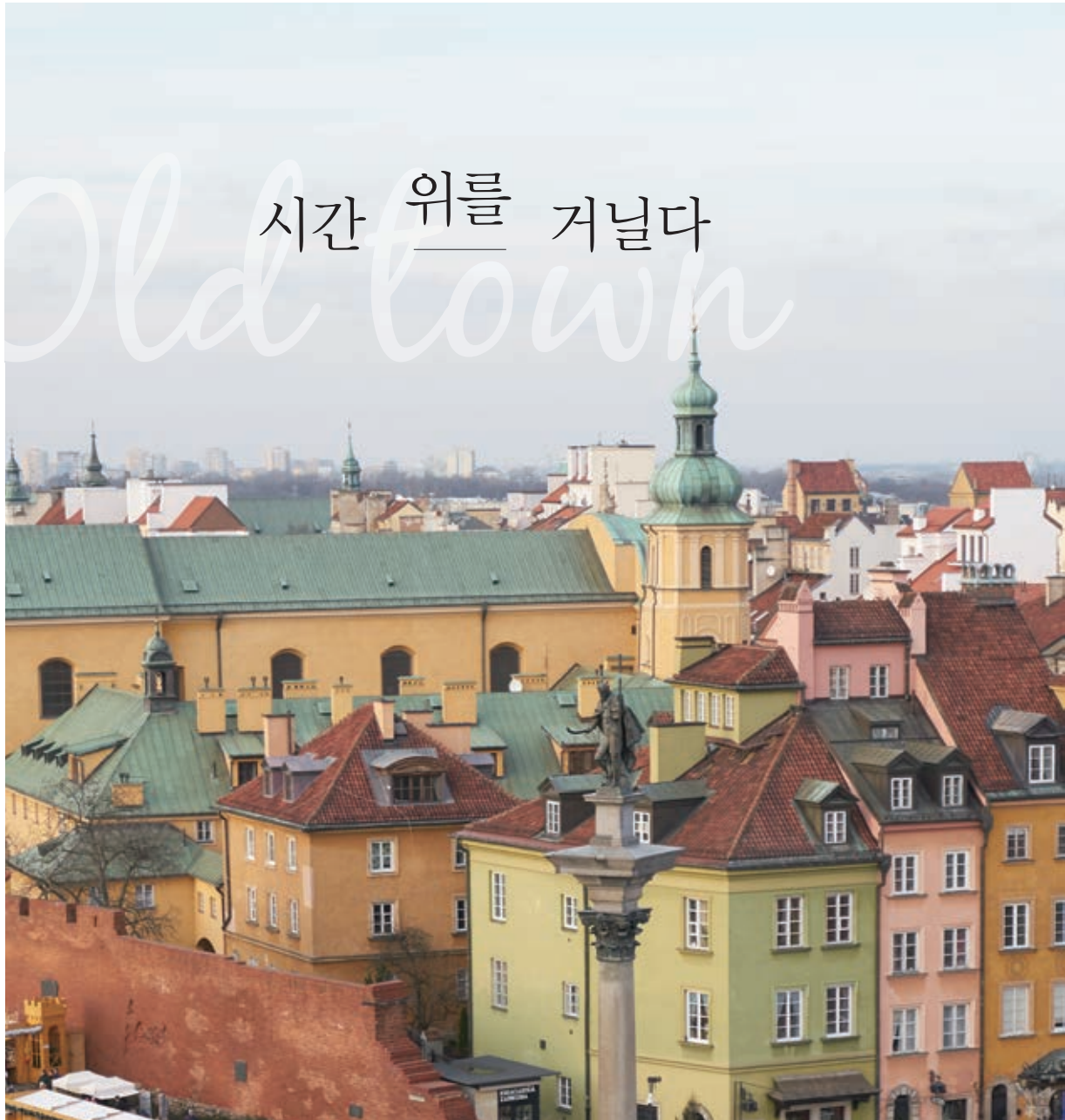
사실 과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폭력과 위협 속에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을 점차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 그리고 통계도 변해왔다. 게다가 기술발달에 따라 몰래카메라 촬영과 같은 성범죄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이처럼 시대 변화와 다양한 비판과 해석 속에서 법과 사회도 바뀌고 통계도 바뀐다.

하지만 아직 통계가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거울 앞을 가리고 있는 장막들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는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을 짚어보고 싶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따가운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7,2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49.3%에 달했으며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고 답한 경우 역시 48.7%나 됐다. 심지어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54.1%였으며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44%나 됐다고 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여성이 알아서 처신하면 피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사회를 믿고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드러내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범죄가 감춰질수록 범죄자는 안심하고 범죄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곧 범죄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하다가 어렵게 자신이 당한 피해를 증언한 사람에게 우리 사회가 줘야 할 것은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든든한 격려여야 마땅하다. 한겨레



조재근 경성대 수확응용통계학부 교수
jkjo@ks.ac.kr



바르샤바의
올드타운
전망대에서 본
잠코비 광장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멀고도 낯설었다. 여행의 이정표로 삼을 만한 특별한 무엇이 없었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로마의 콜로세움, 런던의 빅벤처럼 그 도시를 친숙하게 여길 만한 어떤 무엇 말이다. 그러나 지난겨울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가 탈린이다.

탈린은 랜드마크를 섭렵하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여행하는 곳이었다. 탈린의 백미는 올드타운인데, 동화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 같은 파스텔 톤의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돌길을 거니노라면 시간 위를 거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대를 가능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만난 것 같기도 했고,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거대한 영화 촬영장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중세와 현재가 한데 뒤엉켜 있는 탈린의 올드타운은 랜드마크가 없어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마냥 좋았다. 오래된 도시의 속살을 헤집으며 온종일 골목길을 쏘다니는 것만으로도 탈린은 여행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오래된 도시들이 즐비한 유럽에서는 올드타운이라 불리는 구시가를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다. 근대에 이르러 도심에서 확장된 부분이거나 아예 새롭게 구성된 도심 말고, 수백 년 전부터 있어 온 오래된 도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유럽의 보편적인 정서다. 재개발과 난개발이 횡행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새것으로 바꾸는 데 열심인 반면 유럽 사람들은 오래된 것일수록 더 좋아한다. 한국의 도로를 가만히 보면 오래되고 낡은 차가 잘 없다. 주기적으로 새 차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오래된 자동차가 자랑거리다. 유럽의 도시 하면 떠오르는 고풍스러운 이미지들은 대부분 올드타운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올드타운이 잘 정비된 곳은 여행지로서도 인기가 좋다. 최근에 불었던 크로아티아 여행 열풍의 실체는 두브로브니크의 올드타운이고, 한결같은 인기를 자랑하는 체코 여행 또한 프라하의 올드타운이 핵심이다. 올드타운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간직한 곳이고, 역사가 기록돼 있으며, 문화가 새겨진 곳이어서 단기간에 도시의 정수를 만나야 하는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올드타운을 얘기하면서 절대 빠트릴 수 없는 곳이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눈물겨운 올드타운일 것이다. 2차 대전이 끝을 향해가고 있을 때 나치에 점령당한 바르샤바에서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났다. 전쟁과 지배를 지속하려는 나치군의 광기 어린 제압은 바르샤바를 초토화시켰는데, 폴란드의 국가적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악의에 가득 찬 파괴였다.



1

1. 크로아티아 여행 열풍을 몰고 온 두브로브니크의 올드타운
2.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복원한 바르샤바의 올드타운 시장
3. 동화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듯한 탈린의 올드타운 골목
4. 프라하 여행의 중심이자 시작한 올드타운 광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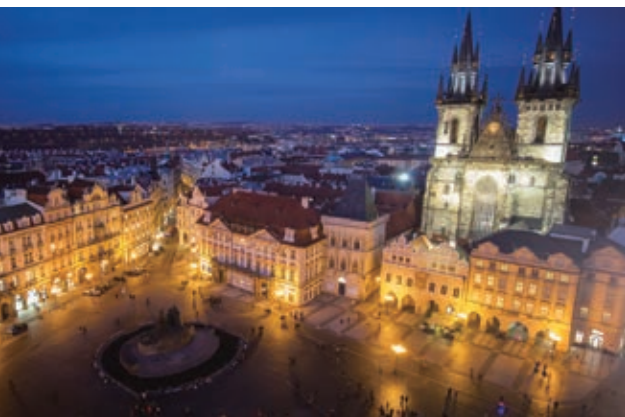
3

2차 대전이 끝난 후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시민들은 결의에 차서 재건에 나섰다. 근대에 지어진 건물들이야 다시 지으면 그만이었지만, 수백 년 된 건물이 즐비했던 올드타운의 파괴는 뼈아픈 일이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올드타운을 복원해야 했던 시민들은 수년에 걸쳐 벽돌 하나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치며 원래의 시장, 주택, 성곽, 교회 등을 전쟁 이전과 '똑같이' 재건해냈다. 기어 이 시간을 되돌려 놓은 것이었다. 올드타운을 복원하는 것은 전쟁의 시간을 지우는 일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건 사례로 꼽히는 바르샤바의 올드타운은 다른 나라의 재건 사업에도 큰 영감을 주었고, 하나의 기준이 됐다. 지금 바르샤바 올드타운의 전망대에 올라가면, '새로 만들어진 원래의 올드타운'이 한눈에 들어온다. 피와 땀과 눈물이 한데 얼룩진 재건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올드타운을 복원한 그때의 바르샤바 시민들이 함께 보이는 듯해서 저절로 숙연해진다.

탈린과 바르샤바의 올드타운, 두브로브니크와 프라하의 올드타운은 모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세계유산이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유산'이라고 한다. 이렇듯 올드타운이란 인류 모두의 것이다. 과거에 산 사람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것이고,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 내가 살아가는 도시의 옛것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유네스코가 나서서 증명한다. 한국에 뉴타운은 넘쳐나도 올드타운이 없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나이 든 사람을 뜻하는 말 중에는 '노인' 말고도 '노신사'라는 말이 있다. 노인에 신사라는 말이 더해진 말로, 멋있게 나이 든 사람을 뜻한다. 노신사가 되려면 평소 쌓고 다듬어온 교양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여느 오래된 도시가 노인이라면, 올드타운은 노신사다. 어차피 나이를 먹어야 하는 것이라면, 나는 올드타운을 닮은 노신사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먼 곳을 여행하고 또 여행하는 것이다. 교양을 체화하는 데는 여행만 한 것이 없으므로, 여행과 올드타운과 노신사라는 단어를 입속에 넣고 가만히 읊어본다. 나에게 좋은 것들. ■

4



박 로드리고 세희 촬영감독 filmrodrigo@naver.com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찍고 영화나 드라마를 가끔 찍는다. 일하는 것보다 여행하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 저서로는 「나는 평생 여행하며 살고 싶다」가 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The Florida Project



디즈니랜드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화

〈탠저린〉이라는 영화가 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지? 하루 동안 벌어지는 트랜스젠더의 소동을 다룬 이 영화가 처음 발표된 건 2015년이였다. 아시아시피 성 소수자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말 그대로, 소수만 보는 영화다. 국내에서는 극장을 '패싱'하고 곧장 IPTV, VOD 등과 같은 2차 시장으로 직행했다. 그런데 지난 1월, 한국에서 늦장 개봉했다. 성 소수자가 한국 문화의 트렌드로 급부상했나?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다. 요는, 특별한 배경 없이 국내 수입사가 개봉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장이다. 그의 신작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작업(project)한 〈플로리다 프로젝트(The Florida Project)〉다. 제목이 성의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다.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전 세계 동심의 열렬한 지지 속에 성업 중인 디즈니랜드가 1971년 개장 전 이 땅을 매입하면서 붙인 이름이 바로 '플로리다 프로젝트'다.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디즈니랜드 주변으로는 관광 시설이 즐비하다. 즐거운 관광 시설에 관광객만 즐비한 게 아니라 홈리스도 즐비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주택담보대출이 역풍을 맞으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최후의 거처로 디즈니랜드 부근의 싸구려 모텔로 몰려들었다. 꿈과 모험의 디즈니랜드가 커버하지 못하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형성된 셈이다. 셀 베이



허남웅 영화평론가
edwoong@naver.com

먼지일보, FILM 2.0을 거쳐 현재 영화평론가로 활동 중. 분야를 막론한 글쓰기와 말하기로 수명을 값어치고 있다. 구원해줄 누군가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

꼬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션 베이커(Sean Baker)라는 감독이 있다. 한국에서는 '튼보잡'이다. 세계에서 영화 좀 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세대 거

커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남의 나라 힘든 생활까지 영화로 봐야 하나, 탐탁지 않은 독자도 있을 거다. 단언컨대, 당신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첫 장면부터 훌쩍 넘어갈 거라는 데 이 기사의 원고료를 건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여섯 살 소녀 무니(브루클린 프린스 분)다.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엄마는 남자를 모델로 끌어들이 돈을 버는 처지다. 이 의미를 알 리 없는 무니에게 유일한 고민이라면 단 1초도 지루해지고 싶지 않다는 거다. 한 달 모델비를 내기도 빠듯한 집안 사정상 가까운 거리의 디즈니랜드는 언감생심이다.

아니다. 무니와 친구들에게는 모텔과 주변의 모든 것이 놀이동산이다. 모텔에 새로 들어온 차량에 침을 뱉다 차주에게 걸리면 삼십육계 줄행랑치는 게 청룡열차보다 짜릿하다. 토플리스 차림으로 일광욕하는 여자를 쳐다보는 재미는 유령의 집에 비견할 만하며,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죽치고 있다 관광객에게 동냥해 모은 돈으로 사 먹는 '아이스끼끼'는 디즈니랜드의 숨사탕보다 달콤하다. 홀리스의 모텔을 디즈니랜드로 만들어버리는 꼬마 악동들의 모험담을 영화 시작부터 늘어놓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사랑하지 않기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아이들의 귀여움을 알리바이 삼아 이들이 속한 세계의 가난과 그로 파생된 영락(零落)한 삶을 영화적으로 착취한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가장 뛰어난 점은 이들의 삶을 가치판단할 쌀 한 톨의 기준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촬영 카메라가 대여섯 살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이들의 눈으로 디즈니랜드 주변의 홀리스들의 삶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디즈니랜드 옆의 매직 캐슬

무니가 집처럼 살고 있는 이 싸구려 모텔의 이름은 악의적으로 놀려대는 것만 같은 '매직 캐슬'이다. 원래는 디즈니랜드의 후광에 기대려고 지은 이름일 텐데 주인조차 이 모텔이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 했을 거다. 알고 보면 이 모텔의 주인 격인 매니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선배이커 감독은 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실제 매직 캐슬을 3년 동안 취재하면서 이곳의 사람들을 모델로 캐릭터를 설정했다. 그중 한 명이 극 중 매직 캐슬의 매니저인 바비(월렘 대표 분)다.

모였다 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꼬마 악동들에 대한 바비의 반응은 ('개저씨'가 아니라) 어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다. 일방적인 훈계조로 아이들의 장난을 금지하기보다 장난이 사고로, 사고가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선에서 꾸짖고 관련한 후속 조치는 부모에게 맡기는 쪽이다. 철없어 보이기 무니의 엄마도 마찬가지다. 바비는 그녀가 모텔에서 매춘하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해도 한편으로는 생계를 이어가려는 마지막 수단임을 이해하기에 노심초사한다.

바비가 장기 투숙자들의 빛간 행동에는 에누리 없이 직위를 이용해 삶에 개입하지 않는 운영 방식은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인물을 대하는 윤리와 직결한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아이의 시선'이다. 적어도 이 영화의 아이들은 미혼모를 부모로 뵈었다고 해서 빼돌리지 않고, 싸구려 모텔에서 장기 투숙한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지도, 디즈니랜드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환경이 이들에게는 신기한 볼거리고 재미있는 놀거리라 이들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같은 저예산의 독립영화는 보통 디지털로 촬영한다. 시공창 같은 현실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데는 어울려도 극중 아이들처럼 신비하고 공상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낭만을 부여하는 35mm 아날로그 필름만 한 게 없다. 한 예로 마흔하늘에 예고 없이 뜯 무지개를 포착한 35mm 필름 이미지는 앞으로 벌어질 마법(magic)의 순간을 예고한다. 엄마의 불법이 드러나 강제적인 이별이 다가오자 무니가 그 아픔을 이겨보겠다고 디즈니랜드로 달려가는 엔딩(이 장면은 아이폰 6S로 촬영됐다)은 아이디어 발상이긴 해도 그 순수함 덕에 눈물 이상의 감정이 마음속에 깊은 우울 하나를 만든다.

왕자와 공주가 모여 사는 디즈니와는 또 다른 꿈과 모험의 세계를 선사하는 <플로리다 프로젝트>(개봉 3월 5일)는 이름값 비싼 블록버스터가 점령한 극장가에 '매직' 같은 흥행을 가능하게 해줄 기대작이다. 내 생각만 이 아니다. <탠저린>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 영화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만든 선배이커 감독의 전작 중 하나다. <탠저린>의 국내 수입사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향한 관심이 심상치 않자(무려 이번 아카데미 영화제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그 후광을 얻으려 뒤늦게 개봉을 결정했을 테다.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지만, 흥행 결과는 고작 4천명 정도로 나빴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그보다 수십 배 이상의 관객을 불러모을 것이 확실하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나 원고료 건 사람이라니까. ☎

2018년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전망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기가 넘친다. 반면 경기회복에 따른 온기가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의 경제성장 등 현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주요 국가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의 과거와 현재의 경제정책과 성과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12월 10%를 기록하며 장기침체의 터널에 진입했다.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이후 가장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무거운 마음으로 나선 국회 연설에서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창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하고 기쁨을 뽐냈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남긴 마법의 숫자와 혁신경제

당시 미국은 기존 산업에서 매월 1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새로운 일자리가 18만개 이상 창출되지 않으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오바마는 1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상상력을 혁신으로 바꾸는 기업인들이 넘쳐나는 미국을 꿈꿨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오바마는 재임시절 전통산업에서 사라진 18만개의 일자리 대신 2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매년 1% 가까운 실업률을 개선했고 임기 8년이 끝나자 실업률은 4.6%로 감소했다.

다른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미국의 전략과 흡사하다. 세계 4대 금융허브이자 MICE(기업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산업으로 유명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최근 벤처 창업을 중점 육성 중이다. 금융 선진국답게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줄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매칭펀드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의 싱가포르 진출을 유도했다. 또한 무인 자율주행차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에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금융 관련 대부분의 규제를 없애 핀테크산업을 육성했다. 1970년대 세워진 낙후된 공단인 에이어 라자 지역을 2011년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 250개가 넘는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30여곳이 활동하도록 만들었다. 조선업 불황으로 10년 만에 개인소득 1위를 서울에 내준 울산이 벤치마킹해야 할 좋은 사례다.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UK), 프랑스의 프렌치테크(La French Tech),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등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스타트업 허브 구축 전략은 결국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인재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캐피탈 등 혁신자원을 자국으로 끌어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한정된 혁신자원 탓에 세계는 혁신자원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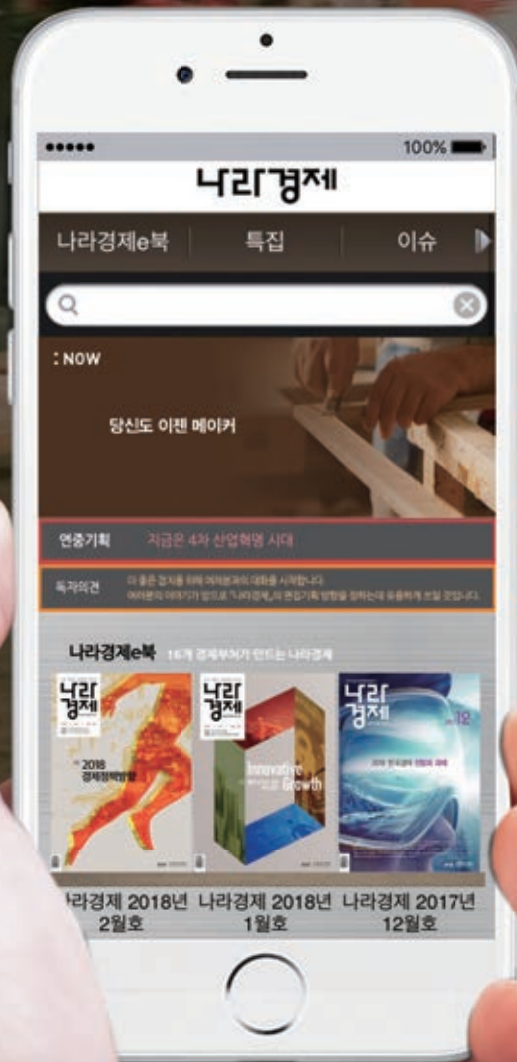
1·2·3차 산업혁명이 원료를 투입해 제품을 만드는 경제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간단한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바꾸는 것이며 디지털 혁신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논리적 도구가 소프트웨어이며 물리적 도구가 3D프린팅이다. 오바마가 남긴 마법의 숫자 10, 8, 6, 4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힌트이기도 하다. 10%의 실업률을 8년 만에 6% 개선해 4%대에 진입시킨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우리 경제의 나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그 출발선은 국경 없이 혁신자원을 끌어들이 상생하는 개방형 혁신, 즉 '오픈이노베이션'과 소프트파워의 강화다. ■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1990년에 창간한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만나보세요.
주요 경제정책과 최신 경제동향 등 『나라경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App Store)와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KDI 나라경제라고 입력한 뒤
〈KDI 나라경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
Paralympic mascot Bandabi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3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3.9-3.18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